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 나라 경제

nara.kdi.re.kr

2024 OCTOBER Vol.407

# 10



특집

## 2025년 나라살림

특별인터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슈

농촌의 재발견

연중기획

인구변화 속 기업의 생존전략





# 한계선

박노해

웁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웁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地境을 넓혀가라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중에서

## 2025년 나라살림



- 10 2025년 예산안 677조4천억 원 편성, 민생활력 제고와 미래 도약에 역점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 12 선도형 R&D와 AI 일상화로 미래 도약 준비  
김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 14 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삶터·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 16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지원해 초격차기술 확보한다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 18 역대 최대 예산으로 든든한 약자복지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 뒷받침  
김건훈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
- 20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최민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 22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 투자  
엄대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 24 교통혁신과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비전 찾을 것  
배성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 26 낙후 생활인프라 개선해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 만든다  
김원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특별인터뷰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8 “농촌의 미래 바꾸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 nara.kdi.re.kr
- www.facebook.com/kdinara1990
- nara\_kdi
- blog.naver.com/kdi\_nara

## 농촌의 재발견

- 36** 새롭게 그려나가는 농촌의 청사진  
박유신 농수축산신문 부국장
  
- 37** 고유한 특산물, 문화, 역사 남아 있는 농촌은  
활용할 자원 많은 좋은 선택지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
  
- 38** 기후변화, 인력 부족에 해결사로 등판한 시농부  
류준영 머니투데이 기자
  
- 40** “김밥계의 델몬트 되는 게 꿈”  
조은우 복을만드는사람들 대표
  
  
- 42** 수려한 자연 경관과 계절별 농업 자원 활용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회복 도와  
정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
  
- 43** 지역 주체들이 문제 발견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어야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중기획 인구감소 너머를 생각하다 ⑩

## 인구변화 속 기업의 생존전략

- 48** 인구변화발 기업변신, ‘패스트팔로어→퍼스트팬권’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50** 미래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에?  
『나라경제』 편집실
  
- 51** “더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 요양서비스 시장이 더 커지길”  
김태성 케어링 대표
  
- 52** 데이터 분석, 로봇 등 혁신 기술 제때 활용해  
고령화 따른 생산성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박경수 삼정KPMG 시니어센터 상무  
박도휘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
  
- 54**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가 협업할 수 있는  
문화·제도 마련돼야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56



60

## 경제정책해설

- 56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보건교육 강화한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 58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지속가능성, 세대 형평성 고려해 연금개혁 추진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세계는 지금

- 60 EU는 정말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까?  
손효정 주벨기에EU대사관경주NATO대표부 서기관
- 63 중국이 미국 연준의 '빅컷'을 반기는 이유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

## 칼럼

- 02 시(詩)작  
한계선  
시 박노해 · 일러스트 조은교
- 32 독서의 문장들  
채도운 『강남콩』  
존재와 돌봄  
김훈비 에세이스트
- 44 K인사이트  
지방에 고학력·고속권 일자리 집중된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46 리더의 격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가?  
신수정 KT 부사장
- 66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교육열로 성장하는 베트남, 한류풍을 타고 한국을 따라오다  
김지은 KOTRA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과장
- 68 혁신을 만나다  
“열 유니콘 IP라면 유니콘 기업 안 부럽다”  
정재식 디오리진 대표
- 70 강양구의 과학 토크  
플라이 카가 날아다니면 행복할까?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 72 통계로 세상 읽기  
삶의 질 어떻게 측정할까?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66



- 74 국제개발협력 이슈특  
**칠레, 디지털 기술 활용해**  
**장시간 병원 대기**에 따른 죽음을 막는다  
 홍기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연구원
- 77 배순탁의 셋리스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솔로 가수**  
 배순탁 음악평론가
- 78 정여울의 나란히 한 길을  
**장엄함과 송고함 앞에서 비로소 견뎌지는 마음**  
 정여울 『감수성 수업』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 82 시평  
**오픈마켓 플랫폼의 명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b>발행</b>      | KDI 경제정보센터  |
| <b>편집</b>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 <b>발행인</b>     | 조동철 KDI 원장  |
| <b>편집인</b>     |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br>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 <b>편집주간</b>    |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실장   |
| <b>편집위원</b>    | 기획재정부 박언영 혁신정책담당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훈 기획재정담당관<br>외교부 신건호 다자경제기구과장<br>행정안전부 김수경 재정정책과장<br>문화체육관광부 김미라 기획혁신담당관<br>농림축산식품부 이강석 홍보담당관<br>산업통상자원부 박위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br>보건복지부 양윤석 기획조정담당관<br>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br>고용노동부 엄대섭 기획재정담당관<br>국토교통부 이재평 기획담당관<br>해양수산부 김원배 기획재정담당관<br>중소벤처기업부 이희완 기획혁신담당관<br>방송통신위원회 강필구 혁신기획담당관<br>공정거래위원회 홍형주 경쟁정책과장<br>금융위원회 윤덕기 정책홍보팀장 |
| <b>편집간사</b>    | 전부선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사무관  |
| <b>편집장</b>     | 강지은   |
| <b>취재·편집기자</b> | 오성록, 홍성아, 최슬기   |
| <b>감수</b>      | 이재열   |
| <b>발행처</b>     | KDI 경제정보센터<br>(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 <b>ISSN</b>    | 1227-8033 10  |
| <b>홈페이지</b>    | <a href="http://nara.kdi.re.kr">http://nara.kdi.re.kr</a>   |
| <b>e-mail</b>  | <a href="mailto:nara@kdi.re.kr">nara@kdi.re.kr</a>  |
| <b>발행일</b>     | 2024년 9월 30일(매월 말일 발행)<br>제35권 10호(통권 407호)   |
| <b>등록일</b>     | 1990년 11월 14일(문화라 04859호)   |
| <b>기사문의</b>    | 044-550-4674  |
| <b>제작지원·인쇄</b> | 문화공감  |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mailto: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 주신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우) 30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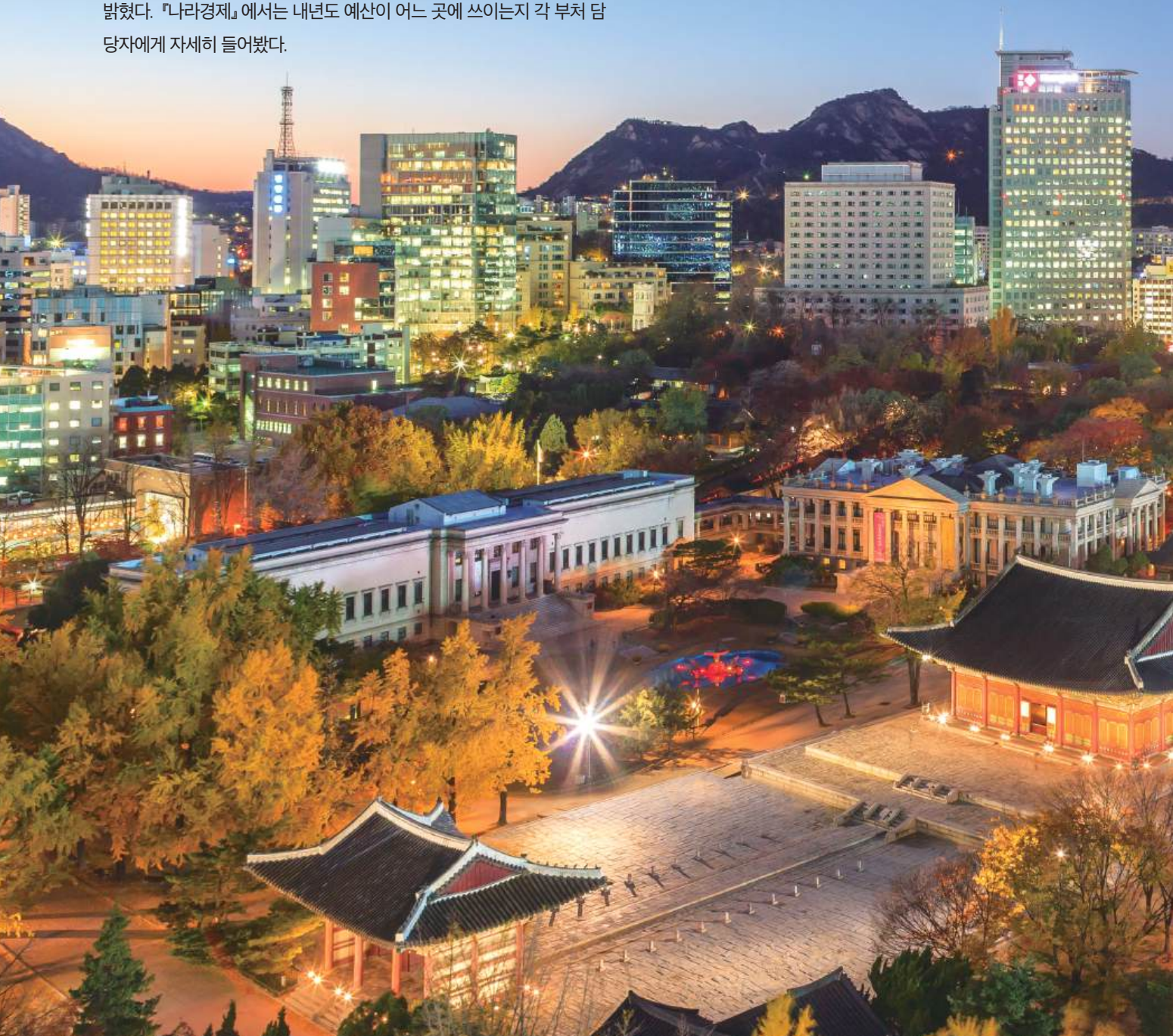
### 9월호 당첨자

강예숙(인천 연수구) / 조석현(경기 의정부시) / 황경연(경기 구리시)

특집

## 2025년 나라살림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천억 원이다. 정부는 관행적이며 비효율적 사업 예산을 축소해 재정 전반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해 나랏돈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라경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각 부처 담당자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 2025년 예산안 677조4천억 원 편성, 민생활력 제고와 미래 도약에 역점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hjpark80@korea.kr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자동차에 힘입은 수출 호 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경제의 회복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부문 간 회복속도의 차이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무엇보다 '민생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제회복 흐름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미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동시에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민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가가 한층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예산안 편성에 임했다.

## 혁신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4대 핵심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

2025년 국가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4천억 원이다. 재정적자가 78조 원, 국가채무가 1,200조 원인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증가율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녹록지 않은 여건일지라도 민생부터 살리겠다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바로 이 3.2%라는 수치 안에 담겨 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편성 시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총 24조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들에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필두로 ①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③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아낌없이 투입할 예정이다.

##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각계각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당장 해결이 시급한 민생과제에 집중하 면서도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 함께 마련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 노동약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두터운 약자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인상한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정부 연평균 인상액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전년 대비 6.6%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개수도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크게 늘렸다. 또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제공하고,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한창 성장세에 있는 유망 소상공인에는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공급해 매출신장을 적극 돕는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이상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새출발과 재도전을 응원한다.

아울러 R&D를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내년도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2% 확대된 29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생긴 저성과·나뉘먹기식 R&D를 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파하고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구체적으로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기술주권 확립과 신시장 선점을 노린다. 또한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stipend)도 신설했다. 이로써 박사는 월 110만 원, 석사는 월 80만 원 이상을 보장받아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다.

#### 저출생 관련 예산 19조7천억 원 편성...

##### 성공적 APEC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강화

셋째,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체질개선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도 철저히 대비한다. 먼저 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조6천억 원 증가한 19조7천억 원으로 편성,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등을 꾀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포함 총 20조 원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완수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련

비용도 3천억 원 지원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2만3천 대에서 9만5천 대로 대폭 확대해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시설도 확대 구축한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병장 봉급을 20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외교를 통해 국가의 내실을 다진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 민간과 함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예산안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하며 꼼꼼히 챙긴 '빈틈없는' 예산안이다. 어느 하나 소외되는 집단이 없게끔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고안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과제에 집중하면서도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함께 마련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해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국민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길 기원해 본다. ■

# 선도형 R&D와 AI 일상화로 미래 도약 준비



김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kdk11@korea.kr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예산과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됐다.

## 전체 예산 19조 원 중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10.4% 증가한 2조3천억 원 편성

2025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올해 17조9천억 원(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 예산 제외)에서 5.9% 증가한 19조 원으로 편성됐다. 그중 특히 R&D 예산은 올해 8조4천억 원에서 16.1% 증가한 9조7천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2023년 예산 9조1천억 원보다도 약 6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를 위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국가 R&D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R&D 분야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넓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R&D의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은 선도형 R&D가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6,800억 원 증가한 4조3,200억 원을 선도형 R&D에 편성했다. 이는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먼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AI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파우드리 구축과 신약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통신·센서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의 양자 관련 선도기술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전형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과감한 방식의 R&D 지원을 실시한다. 원자력, 수소, 차세대 통신과 같은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융합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둘째, 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약 8,800억 원을 편성했다. AI를 제조, 금융, 물류 등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로 확산하고, 정부 공공서비스에 AI를 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전국에 디지털 배움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전 국민이 AI와 디지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더욱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를 확대한다. 해당

부문 예산을 올해 3조2,100억 원에서 내년 3조5,700억 원으로 늘렸다. AI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stipend)을 신설해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연구에는 올해 대비 10.4% 증가한 2조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연구'와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를 신설하고, 수월성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도 올해 140개 과제에서 내년에는 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하는 미들업(middle-up) 방식의 '국가어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해 기초연구를 촘촘히 지원

지난해 6월 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원들이 반도체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1조2,500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기술 분야별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 협상을 타결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지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학자와 교류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국민안전 위한 과학기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

한편 2025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조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R&D 예산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3대 게임체인저,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초격차 첨단기술, 국민안전 등 4대 R&D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연구 등 국가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3조4천억 원 대비 32.4% 증액된 4조5천억 원을 배정했고 기초연구, 인재양성, 글로벌 R&D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올해 5조2천억 원 대비 17.3% 증액된 6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격차 첨단기술 등 역동경제 기반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6조2천억 원 대비 14.5% 증액된 7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민안전 전을 위한 과학기술로서 민·군 기술협력 등 국방 첨단 전력화 및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4조8천억 원 대비 8.3% 증액된 5조2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선도형 R&D로의 전환과 AI 일상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혁신적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것이다. ■

# 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삶터·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kjh7811@korea.kr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단순히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것을 넘어섰다.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식생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여가 혹은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은 첨단기술과 접목해 생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가공·유통·관광 등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청년층의 취업·창업의 장이 되고 있으며, 농촌 공간은 농업인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돼 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디지털, 세대, 공간의 3대 전환을 농정의 기본 가치로 삼고 농업·농촌이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민 모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 농가 수입안정보험 본격 도입에 2천억 원 넘게 편성, 농촌 공간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

우선, 농업·농촌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빈번한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소득·경영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등을 확충했다. 특히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수급 및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득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6개까지 늘리고 상습 침수지역 등을 중심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가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농경지 배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까지 추가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했다. 올해 3월 농식품부는 농촌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이에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해 공간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농촌지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담았다.

####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 **농식품 바우처 확대해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한편 농업생산 방식이 점차 기계화·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목표로 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 축산, 노지 등 분야별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단지 구축, 기술 개발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유입되는 청년층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단지 등 청년들의 주거 및 정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층의 농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과학적 수급예측에 기반한 자율적·선제적 농축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해 등의 상황에도 사과와 같은 과수의 안정적 생산·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 **정부 양곡 공공비축 물량을 45만 톤 규모로 유지하고 국격 제고 및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쌀 해외원조 물량은 15만 톤까지 확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급 불안정 시기에도 농산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및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 안정 정책의 기본이 되는 농업관측 고도화 예산을 증액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수급균형 및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 양곡 공공비축 물량을 45만 톤 규모로 유지하면서 국격 제고 및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쌀 해외원조 물량을 1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논에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조사료,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었을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의 직불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가공 및 사업다각화, 제품화 등을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산물 이용 기회가 제한돼 영양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포함된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해 취약계층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육건농가 대상의 전업·폐업 지원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고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농업·농촌은 모든 국민의 생활과 다양한 방면에서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국민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지원해 초격차기술 확보한다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chestnutite@korea.kr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1조4,789억 원 대비 221억 원 증가(0.2%)한 규모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인 지원사업, 집행부진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5년 산업부 예산안 약 11조5천억 원…

**지원개발, 핵심광물 비축기반 투자 등 경제안보 강화**  
먼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조 7,805억 원에서 2025년 2조894억 원으로 3,089억 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그간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가격이 비싼 탓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쉽게 구비할 수 없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도 강화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신규 지원**

**지난해 역대 최고치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더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 증액 편성**

할 계획이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 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그 외 수요를 바탕으로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지원도 이어나간다.

둘째,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확대 편성했다. 8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

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들도 확대한다. 또한 코트라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증액 편성했다.

셋째,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8,251억 원에서 내년 1조8,509억 원으로 258억 원(1.4%) 확대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 출자제도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석유 비축을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모으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만 현재 리튬 등 국제 광물 가격이 안정된 점을 감안해 비축 확대보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등 비축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요소수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가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 원전이 수출 주력산업 되도록 금융 지원…

##### 산단 지원 부처 간 협업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무탄소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무탄소에너지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지원한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성장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1천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단, 해당 펀드는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제외). 원전 수출품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 원전 홍보 등 직접적인 해외 세일즈 예산도 증액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 확산을 위해 보증지원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보증지원사업은 42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5,250억 원의 자금공급 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2024년 6월 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올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예산 규모도 늘렸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단지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으로 '전시관 등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 등의 사업을 신규·확대 추진한다. 한편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예산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게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올해 1,521억 원에서 2025년 1,951억 원으로 430억 원(28.3%) 확대 편성한다. 한미, 한일 등 양자 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ODA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의 전력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역대 최대 예산으로 든든한 약자복지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 뒷받침



김건훈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  
ghkim75@korea.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25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의 18.6% 수준이다.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담긴 결과다.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도 중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년 예산 125조7천억 원, 정부 총지출의 18.6%… 분반 의료사고 최대 보상 3억 원으로 10배 인상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매월 최대 11만8천 원(월 183만4천 원→195만1천 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에서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자동차 환산율 적용기준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천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천 명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2배 확대하는 한편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되는 부양비 적용비율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해 과도한 수급 제한을 방지하는 등 의료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 규모와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을 적극 돕는다.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등 맞춤형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9천 명 확대하고(12만4천 명→13만 3천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2천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소득 보장에 힘을 쏟는다.

둘째,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예산 3,100억 원을 투입하며,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던 전공의 수당을 내년부터 내과, 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목으로 확대한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를 선진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 수술실 시설장비 개선 등에 1천억 원을 투자하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관별 특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1,8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3천억 원을 투입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암, 소아,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역량을 확충한다.



지난 8월 27일 전남 곡성군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이를 진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환자대변인 제도와 감정·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보험료를 30% 지원해 의료사고 위험으로 필수의료 분야 진입을 주저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신설해 24시간 대응 강화, 바이오헬스 R&D 예산 올해 대비 17.8% 확대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필수가임력 검사 대상자를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며 연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640명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한편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적용대상을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정착하도록 예비 양부모조사 지원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 개→109만8천 개)하고 기초연금은 월 8,700원 인상해(33만5천 원→34만4천 원) 두터운 노후보장이 이뤄지

도록 한다. 경로당의 난방비,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 복지 증진 노력도 병행한다.

넷째, 국민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투자에도 힘을 쏟는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로 확대(8만 명→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2센터를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며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등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 외에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신규 지원(11억 원),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4억 원), K뷰티 확산(147억 원→156억 원) 등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적 상황과 다양한 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이 사회 취약계층의 지지대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

#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최민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minjichoi@korea.kr

기후변화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총 14조8,26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후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국민 안전을 위한 물관리 예산 5.7% 확대…

### 물부족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해 용수공급 강화

첫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물관리 부문에 전년 대비 5.7% 증가한 총 6조4,135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물관리 예산은 국가하천과 지류·지천 정비에 중심으로 한 홍수 대응체계 및 치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전년 대비 87.1% 증가한 688억 원이 투자되며 신규 20개소에 대한 정비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에도 전년 대비 419.4% 증가한 535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2025년에는 자동 유량 측정시설을 86개에서 176개로 확대해 더 빠르고 정확한 홍수 예보를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시 기반 홍수 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1조6,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늘려 도심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가뭄 문제 역시 주요 환경 위기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뭄 대비 및 수질관리에도 힘쓴다. 특히 도서와 내륙의 상습 물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수공급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곳에서 신규 착공한다. 또한 물공급 취약지역의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에도 신규 예산 35억 원을 투자한다.

계속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해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녹조 제거선을 기존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가축분뇨와 같은 수질 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를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도 1,787



지난 8월 8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경계에 있는 창녕함안보 주변에서 녹조 제거선이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에는 자동 유량 측정시설을 86개에서 176개로 확대, 실시간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SI 기반 홍수 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

**재활용 기반이 미미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는 등 순환경제 육성 지원**

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1조5천억 원 투입해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촉진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2030 NDC 달성 기반 마련**

셋째,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예산으로 전년 대비 4.7% 늘린 4조7,198억 원을 편성했다.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녹색금융을 활용해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소저감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에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1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 유망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폐배터리 안전 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에 신규 예산 28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활용 기반이 미미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넷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특히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2만3천 기에서 9만5천 기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일반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은 종료한다. 아울러 지하층 완속 충전의 분산을 위해 주유소, 세차장, 환승주차장 등 생활거점 주변지역에 급속 충전기 보급 투자도 확대(2,475억 원→3,758억 원)한다.

또한 2030년까지 450만 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특별히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급을 늘린다.

다섯째, 기업 및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확대(60개사→100개사)하는 한편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을 확대(150개→250개)한다.

여섯째,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 이용권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 명, 연 10만 원)한다. 이 서비스는 실내 환경 진단, 진료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특히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 기후위기 속에서 물 관리, 탄소중립,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전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

#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 투자



엄대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cjaeoljq@korea.kr

“출산율 0.7명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왜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보다 더 크게 화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70% 수준에 불과’,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월 임금 격차 196만 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 임금 격차 235만 원’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최근 노동시장 정책의 화두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다. “쉬웠음 청년 74%, 구직 의사 없어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 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예산안은 위와 같은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에 160억 원 투자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은 35조3,661억 원으로, 2024년 예산 33조6,825억 원 대비 5.0% 증가했다. 올해보다 단 순히 5.0%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 효율화 작업을 선행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에 추가 증액분을 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했다.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보다 높은 고용부 예산 증가율(5.0%)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 및 일자리 해결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면에 담지 못한 세부 예산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검색하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6월 과거 ‘백화점식 대책 나열’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가 일·가정 양립이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1조7천억 원 증액한 4조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충분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육아휴직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사용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1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용 방법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필요할 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자녀 방학 등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고 키우는 맞돌봄 문화 확산도 전폭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자녀연령을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1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약자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인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이음센터에서 제공해 왔던 노무사 기초상담에 더해 현장 수요가 많은 전문 법률·세무 교육, 업종별·지역별 노동법 특강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노무제공자 권리구제를 위해 이음센터 안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쉼터 설치 등 일터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도 8개소 추가해 45개소로 확대한다.

원청 노사가 영세한 협력사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 지원하는 상생복지기금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상생복지 지원금을 5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공동기금은 233억 원에서 299억 원으로 늘린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지급금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용자 704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4월 3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장애 인재융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보다 각각 546억 원, 302억 원 확대된 규모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 원(+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 청년 취업 단계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늘리고, 외국인력 관리 및 산재 예방 재정투자 확대

셋째,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보다 빨리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올케어)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재학 단계부터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교재학생맞춤형(+29억 원) 및 대학재학생맞춤형(+74억 원) 고용서비스 예산을 늘려 지원한다. 특히 내년은 코로나19 시기에 입학한 학년이 졸업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200억 원)도 신설한다. 청년들의 구직단념 예방 및 '쉬었음' 탈출 지원을 위한 도전·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도 5만8천 명(+1만 명)으로 늘렸다. 이 외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과 구직 청년을 매칭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억 원, +1,649억 원)에 빈 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하고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연수 지원사업(72억 원) 등을 마련한다.

끝으로,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재해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늘리고 폭염설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1조3천억 원)도 확대한다.

고용부 예산안은 올해 11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민 입장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이 저출생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 교통혁신과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비전 찾을 것



**배성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baesungho@korea.kr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의 8.6% 수준인 58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 예산은 성격에 따라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SOC 분야(19조6천억 원)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38조6천억 원)로 구분된다. 2025년 예산안은 민생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민 주거안정,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 국토 균형발전, 국민안전 강화,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혁신 등 5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호 공급

첫째,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 호(공공분양 10만 호, 공공임대 15만2천 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규모다. 특히 공공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공공임대 3만8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9천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및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을 상향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도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3천 호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 수준인 7,500호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을 도입해 향후 10년간 10만 호를 공급한다.

노후화된 도시공간의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용자)사업을 신설해 20곳에 평균 20억 원을 지원한다.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용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30곳)한다.

둘째,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별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시간, 지방권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2025년 개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5년 개통),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2025년 착공), 서울-세종 고속도로(2026년 개통)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025년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2026년 개통), 호남고속철도 2단계(2027년 개통) 등 주요 간선철도망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K패스 사업은 전 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2024년 185만 명→2025년 362만 명, 2,375억 원)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할인을 지원하는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635대를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내년에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 기업혁신파크 조성 지원해 지역 자생력 높이고 전기차 시험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

셋째,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 구축을 신속히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새만금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완도·강진 고속도로,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교통망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유치·인재육성·인구유입 등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거점 조성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기업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역(거제·당진·춘천·포항)의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 35곳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10곳 추진한다.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연내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기본계

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부지하고속도로 기흥 IC-양재 IC 구간의 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한다.

넷째,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국토 안전을 강화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보강을 위한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늘리고(2,884억 원, +18.3%), 도로 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 원, +5.2%)한다. 산발·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5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장비자동화 등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고 건축 안전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에 300억 원을 출자하고,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개최 등 현지 발주국가와 우리 기업의 교류 기회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이자 미래 동력인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과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4,879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6건과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희망하며 미래의 비전과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아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

# 낙후 생활인프라 개선해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 만든다



김원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kwb73@korea.kr



지난 8월 25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젊은이들이 서핑을 배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생활력, 미래 도약’을 목표로 편성한 내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4% 증가한 6조7,837억 원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수행하는 기후 대응기금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6조8,641억 원으로 2024년(6조7,117억 원)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부문에 3조1,874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850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 원, 해양환경 부문에 3,459억 원,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2,131억 원을 편성했다. 해수부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2024년(7,518억 원)보다 9.5% 증가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을 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②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정 전망 확충, ③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개선, ④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연계한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해 청년 유입...

**3천억 원대 수산물 비축·수매 지원으로 수급불안 대비** 첫째,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어촌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3개소(50억 원)를 구축하고, 열악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도 3개소(30억 원) 조성하는 등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지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휴양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2개소)을 내년부터 민관 협업으

로 본격 추진한다. 또한 서핑,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전국 8개소)과 해양치유센터(전국 5개소) 등 지역 고유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지속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등대를 활용한 등대해양문화공간(1개소)도 새롭게 만든다.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총 3척으로 늘려 선박의 고장이나 결항에도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29척, 5억 원)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둘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을 위한 경영·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먼저, 수산물 비축사업(1,751억 원)과 수매지원(1,527억 원)으로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식탁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할인(1천억 원)도 지속한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결제 자금을 지원(105억 원)하고 수산물 직거래 매장을 새롭게 설치(30개소, 14억 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최근 국내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60억 원)에도 착수한다.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역감시(165개소, 90억 원)와 국내 주요 위판장 및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검사(174억 원)를 지속하는 한편, 부산 공동어시장(360억 원) 및 통영 거점 위판장(28억 원), 제주 거점 위판장(5억 원) 등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해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8억 원)한다.

이 외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1,661억 원→1,928억 원)해 재해 어선원의 재할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한다. 또 올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영세 연근해어선 약 5천 척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21억 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감척어선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수거체계 구축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등 국제사회와 기후대응 연대 강화**  
셋째,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개선을 추진한다. 어선 감척 규모를 확대(295척→454척, 1,626억 원→2,206억 원)하는 한편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30억 원)하는 등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양식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2개소 설치 등 양식업(488억 원)과 종자산업(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 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15개사, 30억 원)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강화(1,990억 원→2,315억 원)한다.

이 외에도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1조2,900억 원→1조3,900억 원)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11억 원)도 추진한다.

넷째, 기후위기에 대응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억 원→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 체계(28억 원)도 구축한다. 또한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480억 원)과 어항(3,378억 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를 확대(552억 원→872억 원)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19억 원)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 원)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 충실히 대응해 정부안의 취지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양수산 민생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해 집행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다. 

# “농촌의 미래 바꾸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

## 27년 동안 농촌정책을 연구하다 농정을 관장하는 부처 수장이 되셨습니다. 취임 후 9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먼저 그간의 다양한 연구 경험을 통해 구상했던 정책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9개월간 이틀에 한 번은 현장에서 농업인, 농촌 주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농촌소멸,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가경영 위협 등 시급한 농업·농촌 현안과 현장의 다양한 기대를 실감했습니다. 이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균형발전 전문가인 만큼 소멸위기의 농촌을 살릴 방안이 가장 궁금합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저출생 극복, 식량안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됩니다. 즉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촌이 단순히 농사짓는 땅을 넘어 국민 전체에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농촌에 청년 등의 인구나 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약 1조9,500억 원 반영한 만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과 기업의 농촌 유입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먼저 청년들이 농촌에서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농업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

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농업 외에도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에 창업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뿐 아니라 농촌공간을 기술 실증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업이 농촌에서 사업하기 더 수월해지도록 규제도 완화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 지정 목적을 상실한 3ha 이하 자투리 농지가 서울 여의도의 70배가 넘습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디서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에 주거·복지·문화 서비스 등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농촌에 살지 않지만 농촌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농촌 살리기에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농촌 정주인구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한 달에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 혹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거나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인구를 적극 늘려나가기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이 농촌소멸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민이 농촌을 다양하게 경험·활용하고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과 같은 삶의 방식이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특색 있는 농·산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산하며 빈집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6만6천 동에 이르는 농촌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건·치안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결합해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PROFILE

서울대 행정학 박사

1997.7.~201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2015.3.~201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017.2.~20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2020.2.~202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

2023.12.~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방안도 긴요합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일은 농식품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지난 9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의 기초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량 감소 위험에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해당 보험 도입으로 가격하락 위험까지 보전하게 됐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를 관리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을 지난해 기준 14%에서 2027년 30%까지 확대하는 등 농업의 스마트화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와 유통구조 문제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큼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열어 유통단계를 축소했고, 지난 8월 20일 기준 거래액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내 5천억 원, 2027년까지 연간 5조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산지 유통 규모화 등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유통 단계별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공급 안정 차원에서는 지난 1월 생육 관리협의체를 만들어 과수농가에 냉해 예방 약제 등을 보급하고 이상기온에 대해 조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가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과수 재배 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화, 재해내성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 방귀세' 부과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뤘가고 있나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지만,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2.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영농방식 전환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더 수월하도록 농지 규제 등 완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하고 가격 담합 등 불법·불공정 거래 엄단 조치



을 지원 중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학비료 등의 투입을 최적화하는 스마트농업 확산, 논물 관리와 화학비료 절감, 저메탄사로 개발·보급 및 분뇨 활용 확대, 시설농업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물떼기, 논물 알계 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로 급이, 아미노산 강화 사료 급이 등 농가의 참여가 용이한 탄소감축 기술 이행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연간 9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지원을 올해 총 598건 26억 2,300만 원에서 내년 799건 35억 4,9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내년에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주민 중심(리빙랩 방식)의 재생에너지 공급 및 운영 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농식품부는 그간 종합대책 수립, 전담조직 신설, 관련 법 제정, 전용 펀드 조성으로 농식품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푸드테크 분야는 올해부터 전북 익산,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민간 협업으로 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뿐 아니라 푸드테크 계약학과, 대학 벤처연구팀, 푸드테크 기업 인턴십을 지원해 청년층의 산업 진입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6대 분야별 연구·생산 거점기관(11개소), 벤처캠퍼스(5개소), 공공 바이오파운드리(2개소), 소재 산업화시설(1개소)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운영 중이며, 산업 집적화 및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산·학·연·관의 상호 연계·협업 체계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신제품 개발, 현지 인허가 취득,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연관 산업도 급성장 중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 있나요?

우선 2022년 기준 8조 원 수준인 국내시장 규모를 2027년에는 15조 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4대 주력산업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은 고급화해 가는 시장의 특성상 가격경쟁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 거점인 '원-웰페어밸리'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 대상의 제품 기호 실증, 제품 R&D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로 총 403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시장조사·교육·판로개척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해외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K푸드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91억6천만 달러로 8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8월 말 누

적 기준 전년 대비 8.7% 증가한 64억8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한류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TO 합의에 의해 물류비 지원 사업은 폐지했지만 수출바우처, 신진 물류체계 확충, 수출통합조직 역량 강화, 전문단지 조성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했고, 기존 주요 도시 외에 미국 텍사스, 중국 칭다오, 일본 후쿠오카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매장 입점을 추진하는 한편 브라질, 멕시코 한식급식 도입 등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한식을 세계 미식문화를 선도하는 매력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수 한식당 연계 인턴십 기회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 확대, 연구 및 관련 DB 구축 등 산업 인프라 강화, 국제 미식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 미식자원 홍보 등으로 한식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푸드와 관광을 연계해 한식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한식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농식품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의 3대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조류인 만큼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없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 분야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의 정착과 고령농의 은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먹거리 걱정이 없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농식품부 본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이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농촌체류형 쉼터 등에 이어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후속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농촌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수 「나라경제」 편집주간

# 존재와 돌봄

채도운 『강낭콩』



경남 진주에서 '보틀북스'라는, 그 지역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등대 같은 서점을 운영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권의 에세이를 출간한 작가 채도운이 이번에는 두 편의 소설이 들어 있는 『강낭콩』을 펴냈다. 첫 번째 단편 〈강낭콩〉은 임신중절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단편 〈식물뿌리〉는 식물인간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모녀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성, 과연 어디까지를 '살아 있는 상태'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몇 년간 해온 돌봄노동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거나(〈식물뿌리〉) 몇 년간 해야 할 돌봄노동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강낭콩〉) 돌봄노동자들의 미래와 삶의 문제가 이 두 단편을 관통하는 주제다. 이 첨예한 전쟁터인 돌봄노동 문제에서 성인 남성들은 철저히 빠져 있고, 한국의 대표 돌봄노동자 3인방인 아내, 딸, 엄마의 이야기들이 조명된다는 점에서부터 매우 뼈아프게 현실적이다.

사실 이 책을 열기 전, 워낙 이 시대의 논쟁적인 주제이기에 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다는 걸 고백한다.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진석의 몸을 이마에서부터 세밀하게 훑으며 마치 '시간의 엑스선'을 투과한 듯 그 몸에 켜켜이 깃든 진석의 역사를 담담히 서술하고, 지구 최초의 식물인 고대 이끼류가 진화하면서 갖게 된 관다발과 진석의 몸에 꽂힌 튜브와 관들을 한데 포개는 상상력으로 포문을 여는 도입부를 읽고,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 꼭 읽어둬야 할 이야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어찌 보면 뻔한 주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힘든 주제를 갖고 독창적인 서사를 만들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채도운은 그만의 관찰력, 표현력, 상상력을 문학적 기교에 담백하게 얹어 그걸 해낸다. 특히 그가 소설 곳곳에 베란다에 방치된 죽은 식물, 지영의 손에 생채기를 낸 몬스테라, 장미꽃다발, 스투키, 냉이 같은 식물들을 절묘하게 배치해서 식물인간인 진석의 상황과 지영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붕괴와 재생의 과정을 한데 포개고 겹치며 보여주는 방식은 아름다우면서도 가차 없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이 곧 존재'라는 철학적인 통찰, 한 존재와 관련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경험이 없다면 기억은 점멸하고 존재도 점점 사라진다는 차가운 사실까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한 사람과의 추억은 돌봄의 대가가 된다. 추억이 소진되고 고갈되면 돌봄도 끝난다. 지영은 더 이상 간병을 지속할 수 없었다. 진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로 지영과 진석 사이의 추억은 유한한

한계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p.63

하지만 나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설명 '존재하기 위해 기억되는 것'이 진실일지라도, 그 반대인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저절로 생각하게 됐다. 그가 소설을 통해 전해준 여성들의 이야기, 이토록 생생하고 가장 사적이어서 가장 정치적이기도 한 이야기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존재의 사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른테면 이제 나는 식물이 된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생활에서 "길마다 밭에 걸리는 돌"이 된 사람을 보면 소설 속 지영을 떠올리며 전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영이 슬아에게 건네는 바닐라라떼 같은 어떤 것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기꺼이 건넬 수 있을 것 같다. '돌봄'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살핌'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살핌이 쌓이면 연대가 되니까.

그리고 불행이 괴로운 이유는 "불행을 외면하려고만 해서"이기에, 불행을 받아들이고 "불행을 벗 삼아 살자"라던 지영의 말을 아주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언젠가 아주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저 말이 나를 가만히 일으킬 거라고 믿는다. 늘 마음속으로 다져왔던 다짐들에 구체성과 다른 각도의 시선과 어떤 믿음을 더해준 채도운에게 고맙다. 그의 다음 소설을 열렬히 기다리겠다. 📖

김흔비 에세이스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다정소감』 저자  
vgbd8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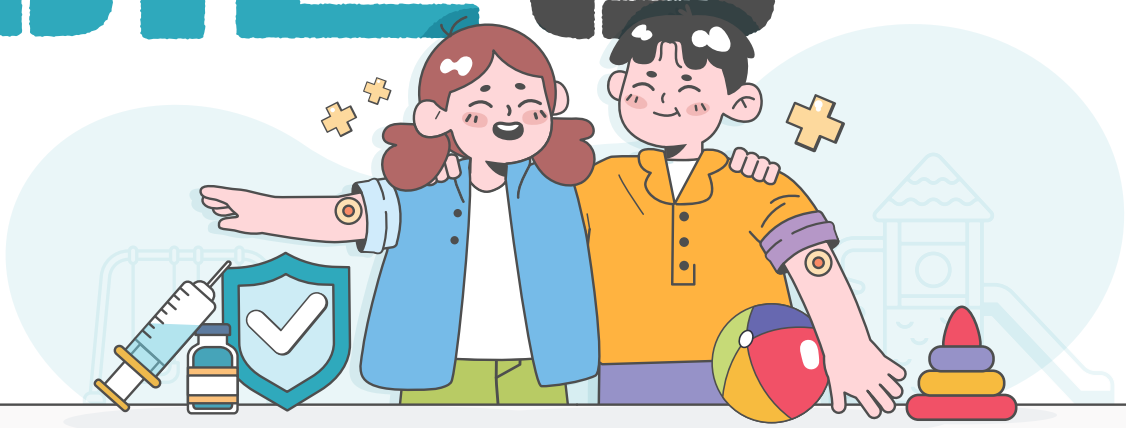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질병을

이길병으로!



지원대상

생후 6개월 이상 ~ 13세 어린이 (2011.1.1. ~ 2024.8.31. 출생자)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지원기간

- 2회 접종자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자 | 2024.10.2.(수) ~ 2025.4.30.(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이슈

## 농촌의 재발견

최근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규 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이 2010년 14.3%에서 2021년 20.1%로 늘어난 것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가늠케 한다. 더불어 정부는 농촌의 디지털, 세대, 공간의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나라경제』가 소멸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장이자 혁신, 치유의 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살펴봤다.







## 새롭게 그려나가는 농촌의 청사진

농촌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 공급원이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우리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농촌의 기능은 일일이 나열하기 무색하리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공동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으며 그 존립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통계청이 연초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전망되고, 2050년 총인구는 2022년 5,169만2천 명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농촌 읍·면 인구는 2022년 961만 명에서 2050년 845만 명으로 약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인구의 50.5%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농촌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상황까지 초래하며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까지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수도권의 과밀화,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을 우려해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농촌이 단

순한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관광, 귀농, 귀촌, 농촌 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것에 착안해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3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29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연초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3월엔 그 결과물인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청년층·혁신가·기업가·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농촌공간 테스트 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 3대 공간 전환을 통해 농촌을 농업 생산과 인구 유지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4월 22일에는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도 확정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촌소멸 대응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1조9,494억 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원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농촌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번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이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유신**



지난해 5월 충북 제천 덕산면 청년마을(좌)에서 진행되는 청년 농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우)



## 고유한 특산품, 문화, 역사 남아 있는 농촌은 활용할 자원 많은 좋은 선택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많은 농촌도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숨겨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인구는 줄었지만, 여전히 그곳의 기반시설과 고유한 특산품, 문화, 역사, 부동산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에게는 활용할 자원이 많은 환경이었다. 또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작은 성공에도 쉽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리플레이스(RE:PLACE)는 정착하기 좋은 지역을 6개월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옥, 폐역, 폐교 등의 자원이 방치된 장면을 마주했고, 또 너무 많은 농촌이 아직은 이주민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고심 끝에 아무 연구도 없는 경북 문경시 산양면의 작은 농촌 마을에 있는 한옥에서 시작해 보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 담당 공무원, 지역 활동가 등 사람을 보고 내린 선택이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을 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할 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찹쌀이 있으니 인절미 떡와플, 오미자가 있으니 청으로 만들어 오미자에이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메뉴를 문경산 농산품으로 개발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리플레이스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나갔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지역 농산물 소비 등의 지표가 정립됐고, 여기에 경제적 상생 지표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역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 우리 비즈니스로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찾은 것이다.

리플레이스가 농촌에 만든 비즈니스는 어땠을까?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만 농촌의 고즈넉함과 한옥 그리

1800년대 초 건립된 고택을 리플레이스가 카페로 재탄생시킨 경북 문경의 화수헌. ©필자 제공



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메뉴들은 SNS에 언급되기 충분했다. 초기에 매출은 적었지만 10명이 방문하면 6명 정도가 우리 공간을 SNS에 언급해 줬다. 그렇게 고객 경험이 쌓여가다 어느 지점에서 반응이 폭발하게 됐다. 그리고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우리 공간은 2018년 9월 추석을 맞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온 친척, 친구,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된 것이다. 한번 매출이 오르고 입소문이 나자 지역 언론에서 주목했고, 또 ‘문경 카페’라는 키워드에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노출됐다. 그렇게 우리 공간은 점점 로컬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200년 된 폐가가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현재 리플레이스는 경북 문경의 한옥스테이&카페 화수헌, 베이커리&여행안내소 산양정행소, 여성전용 세어하우스 봉오리세어하우스, 경북 영양의 복합문화공간 연당림 등 7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러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을 찾아가서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나는 아직도 소멸 위기 지역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휴일이 많아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고 SRT 노선이 확장되며 국토가 가까워지고 있다. 좋은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소멸되는 농촌이 객관적으로도 좋은 선택지가 된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기회가 따른다는 말처럼 농촌을 새롭게 바라볼 때인 것 같다. ■



## 기후변화, 인력 부족에 해결사로 등판한 시농부

“스마트 썬속 01에서 저온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 썬속 02에서 저온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농부 김귀농 씨 전화로 전달된 이상기온 알람 내용이다. 비닐하우스 내 기온이 미리 설정해 둔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 씨는 “기온이 작물에 해를 가할 정도로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보이면 그 현상이 일어나기 10분 전 전화로 알림이 온다”며 “특히 농장에선 고온보다는 냉해 피해가 막심한데 짭짤이 토마토의 경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을 이 서비스 덕에 피했다”고 말했다. 이는 애그테크(농업기술) 스타트업 ‘팀스페이스팜’이 개발한 데이터농업서비스 ‘스마트 썬속’이다. 비전 시가 탑재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온디바이스(on-device) 센서가 농작물을 촬영·분석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병충해 여부 등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한다.

### 붙이면 자율주행농기계로 변신...

#### 더 지능화된 플랫폼으로 고효율 영농 지원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폭염, 국지성 호우는 과일·채소류 가격을 들쭉이게 했다. 물가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최우선이 되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심이 미미했던 애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재배 적지의 변화,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농산물 수급 악화, 농산물·식품 수요 다변화,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식량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애그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애그테크는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농작물의 생산·유통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공통된 목표는 ‘스마트농업’의 실현이다. 스마트농업이란 시설농업, 노지농업, 생산 후 유통·물류·소비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의사결정 및 자동화를 이루는 농업을 말한다.

스마트농업의 대표 기업으로는 근래 몸값이 경총 뽀 애그

테크 스타트업 ‘긴트’를 꼽을 수 있다. 긴트는 트랙터, 이앙기 등 기존 농기계에 최신 로봇기술을 입혀 생산성·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농기계도 지정된 위치에 자율주행 조립키트(제품명: 플루바 오토)를 붙이면 자율주행농기계로 변신한다. 온전한 완성품을 구매하는 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아이템이다. 기존 완성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대략 1천여만 원 선에서 필수 조립부품을 사다 부착하는 간편한 형태로 농민들의 자율주행 기술 활용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애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적절한 가격에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잇달아 선보이는 중이다.

수확·파종 시기, 농약 살포 위치·양 등 기존 농업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했던 영농활동에 AI 기술을 접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무인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각광을 받고 있다. 에이오팜은 컨베이어 벨트와 로봇팔을 접목해 농산물 품질 검사·선별이 가능한 ‘에이오비전’을 내놨다. 기존에 육안으로 골라냈던 불량품을 시가 찾아내 개별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는 사과, 감귤, 참외, 토마토, 복숭아, 감, 멜론, 딸기, 버섯 등 9종을 선별할 수 있다. 초당 10개, 시스템 1개 라인당 최소 14만4천 개(하루 8시간 기준)의 선별이 가능하다. 또 검사 농산물 1개당 최소 24장의 이미지를 분석해 검사 정확도가 95%에 달한다.

애그유니가 개발한 에어돔 형태의 식물공장. ©(주)애그유니





트랙터에 설치된 긴트의 자율주행 조립키트 '플루바 오토'. ©GINT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보급 중인 1세대 스마트팜이 편의성 중심인 반면, 차세대인 2, 3세대 스마트팜은 지능화된 농업 플랫폼이다. 데이터와 시를 토대로 누구나 큰 노동력 없이 고효율의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 애그유니의 에어돔 형태 식물공장과 조립식 맞춤형 관제 토경재배시스템이 한 예다.

이 회사의 식물공장은 기존 온실형태에 철 구조물이 없는 완전 밀폐형의 단일동으로 500~2,000평 규모의 시설재배가 가능하다. 공기압, 공기열, 지열을 활용한 맞춤형 시스템 및 태양광의 80%를 투과시키는 특수필름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농촌진흥청 실증시험 결과 방울토마토, 멜론 등의 생산량은 일반 비닐 온실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생육 속도와 당도 등 품질 측면에서도 기존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작물 재배 효과뿐 아니라 양압시스템을 통해 폭염, 태풍, 폭설과 같은 기후변화 및 병충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유지·관리·구현할 수 있어 미래농업에 최적화된 전문생산시설이라 볼 수있다. 또 상토기반의 조립식(모듈식) 수직재배 시스템(그로와이드)을 개발해 의료용 대마, 와사비, 천마 등 다양한 고부가 약용작물을 연구·재배 중이다. 온도·습도, 근권부(뿌리 및 토양) 생육 정보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에 맞는 토양 공기압, 양액 및 광원(LED) 등을 조절하며 재배 처방을 데이터화해 내는 맞춤형 재배 시스템을 갖췄다.



(위) 팀스페이스팜의 생육측정 카메라. ©팀스페이스팜

(아래) 에이오팜의 AI 농산물 선별 솔루션 에이오비전(AIOVISION). ©에이오팜

### 발전 더딘 韓 스마트농업, 현장 특성 반영한 R&D 필요

글로벌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하고 있다. 내년엔 220억 달러(약 29조5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은 자국 내 보급 및 해외수출 등을 위해 일찍이 스마트농업에 투자해 왔다. 우리나라도 스마트농업에 많은 R&D 예산을 투입했으나 R&D와 현장 기술수요 간 불일치로 현장보급 및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다. 농업인들은 스마트농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금 부담, 작은 영농 규모 등의 이유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량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은 농가 수용성 부족, 농업데이터 통합 미진, 작은 시장 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 “김밥계의 델몬트 되는 게 꿈”

조은우 복을만드는사람들 대표



경남 하동 작은 농촌에 위치한 식품회사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최초로 냉동김밥을 개발해 마켓컬리 등 온라인 마켓 입점은 물론 20개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복을만드는사람들(이하 복만사)이 그 주인공. 농촌에서 기회를 찾아 우리 농산물로 만든 냉동김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조은우 대표를 만나봤다.

### 하동에는 어떻게 내려오게 됐나.

서울에서 죽 프랜차이즈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죽집을 할 당시 아기에게 주려고 소금간을 하지 않는 손님을 만나며 배달이유식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알아보니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농촌이나 도시 외곽으로 가야 했다. 당시 자본이나 인프라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인이 하동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이강삼 슬로푸드 대표를 소개해 줬다. 이 대표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2011년 하동으로 귀촌해 사업을 시작했다.

### 냉동김밥을 아이টে으로 선택한 계기는?

처음에는 하동이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 천안 호두과자, 통영 꿀빵처럼 하동을 대표하는 간식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역 특산 간식은 역사와 전통 등 시간적 조건이 필요해 빠르게 성장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치즈스틱으로 아이টে을 바꾸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도 했는데, 치즈스틱에 들어가는 치즈는 수입산이고 빵가루는 대기업 제품이다 보니 하동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다. 우리 농산물이 많이 쓰이는 아이টে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2018년 일본에서 '김밥[한국식 노리마키(김초밥)]'이라는 이름으로 냉동김밥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김밥을 열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었고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과감히 도전했다.

### 지역경제를 위해 사업 아이টে을 바꾼 것이 인상 깊다.

이강삼 대표의 영향이 컸다. 이 대표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농촌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는 것이라며, 지역 농수산물을 잘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나 스스로를 농민이라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 냉동김밥 후발업체들도 많아졌다. 복만사 제품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다. 정성을 들여 가능한 한 국산 식재료를 많이 쓰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우리의 차별성이다. 냉동김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안타까웠던 것은 가격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가격경쟁을 하면 품질이 좋아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밥이 잘 풀어지거나 터지고 질 낮은 수입산 재료를 쓰게 된다.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의 문화를 팔아야겠다 생각했다. 국산 재

료로 양질의, 보기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우리 음식문화를 알려야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식품은 트렌드에 민감해 그에 맞춰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이다. 유행하는 레시피나 니즈에 맞춰 신제품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비건이라는 소구점 그리고 저칼로리, 고단백, 간편한 김밥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기술력으로 빠르게 상품화한 것이 비결이다. “비건식인데 이렇게 맛있어?”,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좋아” 같은 후기들이 온라인 마켓에 노출되면서 첫 입점한 마켓컬리 외에 다른 온라인 마켓으로도 확장할 수 있었다. 또 국내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해외 바이어들도 주목하게 돼 수출로까지 이어졌다.

### 해외시장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

미국, 캐나다, 유럽 등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2022년에 50만 달러, 2023년에 120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400만~50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트레이더조의 냉동김밥을 유명 틱톡커가 시식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미국시장에서 제일 잘 팔린다. K문화가 더 확산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언젠가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할랄인증, 유대인들을 위한 코셔인증 등을 미리 받아냈다.

### 트레이더조에는 원래 복만사가 입점할 계획이었다고.

2021년 7월 열린 식품박람회에서의 만난 해외바이어 중 하나가 트레이더조였다. 1년 정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현지에 맞게 레시피의 완성도를 올렸고, 양산을 위한 미팅까지 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생산물량으로는 트레이더조에 납품을 할 여력이 없었다. 기존 거래처 물량으로도 딱 찬 상황이었다. 그래서 구미의 업체를 소개하며 그쪽을 접촉하면 빠를 것이라고 안내했다. 당시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또한 잘한 결정이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고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그래서 미국 출시가 늦어졌다면 냉동김밥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는 지금의 기회가 왔을까 싶다.

### 하동 지역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창업 초기에는 지역 농가의 농산물로 제품을 생산했다. 하루에 몇천 개 만들 때라 농가와 계약재배로 가능한 규모였다. 그런데 사업이 확대되며 바이어들의 식품에 대한 검증 서류가 많아지고, 필요한 물량도 커져 지역 농가가 이러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의 개별농가와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 농식품 기업이 우리 김밥에 들어가는 제품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로컬푸드 사례를 만들고 싶어 이들에 이런 사업 아이템을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섯농가에서 재배를 넘어 2차 가공을 하면 우리는 그 제품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농촌지역에 자리 잡은 장단점을 꼽는다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다. 또 공장이나 식품클러스터와 달리 교대근무가 어려운 환경이라 하루 8시간만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생산량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장점은 지역의 유대관계가 끈끈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냉동김밥 성공스토리가 복만사에만 맞춰져 있는데 주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경남 농업기술원의 1인 간편식 개발사업에 선정돼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출바우처 사업이나 포장지 생산 등을 지원해 줬다. 경상남도청에서는 공장 증설은 물론 전 세계 김밥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 든든하다. 대한민국 농민,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능한 성과였다.

### 더 많은 이가 농촌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젊은 농민 사업가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알려져야 한다. 아무래도 자본으로 움직이니깐. 지금 젊은이들은 신기술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농촌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새롭기 때문에 기회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 그런데 정책자금이 보통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 소진된다. 트레이더조 때처럼 7~8월에 기회가 오면 시설 증설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다. 농촌에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특별자금이 있다면 농촌에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복만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냉동김밥으로 성공하니 주변에서 주먹밥도 하고 볶음밥도 하면서 종합식품회사로 키우고싶다 한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싶다. 김밥 하나로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 김밥계의 델몬트 같은 회사가 되는 게 꿈이다. 📖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 수려한 자연 경관과 계절별 농업 자원 활용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회복 도와

치유농업은 농업과 자연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치유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다. 현대인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농업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는 농업의 역할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건강 증진과 치유의 수단으로 확장하면서, 농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충남대 「치유농업 제도기반 마련용역」 연구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는 약 3조7,274억 원에 이른다. 이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유농업은 특히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텃밭 가꾸기, 원예 활동 등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심리적·정신적 회복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농업과 연계된 치유농업은 도시민들이 자연을 접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규칙적인 농업활동은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자연 속의 녹색공간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자기치유력을 강화한다. 특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은 치유농업이 단순한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치유농업은 크게 농장형, 마을형, 기관형으로 나뉘는데, 도심 속 치유농업 시설은 의료 및 복지 기관과 연계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농촌의 치유농업 시설은 자연 경관과 농업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활로를 제공한다.

농촌의 치유농업 시설에서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계절별 농업 자원을 활용해 각종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지난 5월 경남 진주시 대평면 물사랑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물사랑교육농장

는 방문자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농촌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치유농업이 도농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 해당 지역의 상생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치유농업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간의 협력을 통해 복지 정책과 연계한다면,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증진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최첨단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면 치유농업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치유농업은 현대사회의 복지와 경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산업으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농촌과 도시 모두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 지역 주체들이 문제 발견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어야

저출생 초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입각해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해당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다수는 농촌지역이다. 그런 까닭에 농촌소멸은 지방소멸 문제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시책에도 농촌 활성화를 겨냥한 것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농촌소멸 문제는 보다 세밀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농촌 내에서도 시·군청 소재지에서 떨어진 원격지역, 면 지역일수록 공동화가 심화되고 필수서비스가 더욱 열악하다. 고령화 심화로 면 지역은 농가 경영주 중 40대 미만 연령층 비율이 평균 0.6%에 머무는 등 지역 농업을 이어갈 인적 자원도 태부족이다.

농촌소멸 위기를 단순히 수사 차원의 문제나 먼 미래의 일로 여길 수는 없다. 필수서비스 시설이 사라져 주민이 겪는 불편, 영농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휴경지가 늘어나는 상황, 폐교 위기에 직면한 농촌 학교 증가 등은 모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최근 신선식품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없는 ‘식품사막’이 확산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해법이 요구되는 배경이며,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부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농촌의 잠재력도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농촌은 식량 공급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은 거주공간이나 여가공간 역할도 농촌에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 규모가 2010년대 중반 이래 줄곧 40만 명대를 상회해 온 것 그리고 국민들의 농촌관광 참여율(농촌진흥청 집계)이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는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 경제활동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의 신규 창업 사업체 중 농촌지역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농촌에 기대되는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일도 농촌소멸 대책에 요구된다.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농촌소멸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해법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 농촌의 필수서비스 기능 유지 및 공백 해소, 지역 유희자산 활용, 새로운 인적자원 유치 등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과 병행해 지역 주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정주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살아보기 체험공간이나 워케이션 시설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농촌에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가 양적인 생활인구의 증대 이상으로 절실하다. 청년이나 잠재적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과 접점을 확대해 가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멸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들을 아우르는 역할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농촌에는 지역사회와 관계 맺고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사진은 대산농촌재단이 주최하는 가족사랑 농촌체험 현장.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ys.moon@kdi.re.kr

서울이 부산보다 생산적인 이유는  
고학력·고속권 일자리가 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주변의 많은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도시의 생산성이  
인구밀도와 비례하는 현상을  
집적효과라 하며, 이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 지방에 고학력·고속권 일자리 집중된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월 두 광역자치단체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청사의 위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관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김포시가 서울로의 편입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논의가 커졌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로 교착상태에 빠지며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 1960년대 산업화로 인구 빠르게 유입된 서울, 강남·강서·강북으로 크게 확장

행정구역과 관련한 위와 같은 논의는 근본적으로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며 촉발됐다. 20세기 이후 교통과 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대도시가 다수 부상했다. 세계 곳곳에서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도시로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열차와 자동차 등 교통의 발전은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기존 행정구역과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대도시의 생활권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게 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해 생활권과 일치시키려고 했다. 일본에서는 1940년대 수도인 도쿄의 행정구역을 도쿄도(都)로 개편했다. 현재 도쿄도의 크기는 서울(605km<sup>2</sup>) 면적의 3.5배에 이

르는 2,194km<sup>2</sup>이다. 따라서 도시를 비교할 때는 도쿄도 내 도쿄특별구(622km<sup>2</sup>)에 해당하는 23구만을 기준으로 서울과 비교하곤 한다. 영국 런던도 행정구역을 확대한 도시다. 1965년에 기존의 런던시를 포함하는 광역 런던(Greater London)이 탄생했으며, 면적도 1,572km<sup>2</sup>에 이르게 됐다.

과거에 서울도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특히 1963년에 서울은 3~4차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며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울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돼 도시의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에 서울은 행정구역을 강남과 강서, 강북 방향으로 크게 확장했다(〈그림〉참고). 현재의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 그리고 강서구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은 이 시기에 확장된 지역이다. 하지만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며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 최근 김포를 비롯해 과거 과천이나 구리, 광명 등도 서울 편입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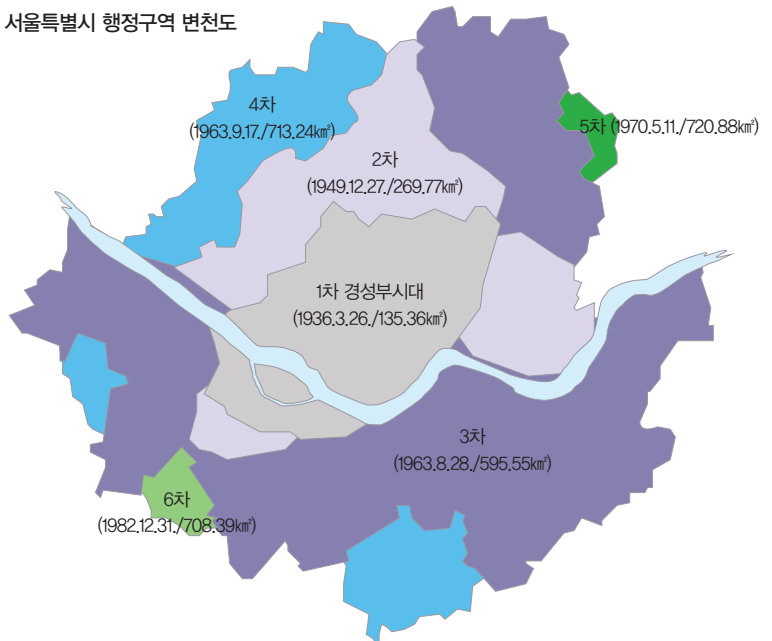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는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나 중앙정부의 조율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도 생활권이 확대되며 주변 지역과 협력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와 협력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에 건설된 위례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은 더욱 힘들어졌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서울생활권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의 생활권 문제를 해소했던 서울과 달리 지방의 대도시는 단순히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 이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대도시의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와 울산은 지난해 1%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일찍부터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2016년 인구가 3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자리를 내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며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도 낮다.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통신기술(CT)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세계적인 산업 발전의 흐름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방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제조업은 발전이 정체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쳤다.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유니콘 기업은 지방에서 등장하지 못했으며 가젤기업이라 불리는 고성장기업의 비율도 매우 낮다. 중앙정부로부터 추진된 정책들은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변천도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시 행정구역의 변천과 도시공간구조의 발전', 2015.5.

### 인접 지역이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

#### 메가시티를 거점으로 함께 혁신 도모해야

서울과 달리 지방에는 거점도시(cognitive hub)라 불릴 만한 세계적인 대도시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4차산업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은 고학력·고숙련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더욱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이 부산보다 생산적인 이유는 서울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주변의 많은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도시의 생산성이 인구밀도와 비례하는 현상을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라 하며, 이는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비수도권에도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집중된 거점도시를 조성해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혁신을 이뤄낼 때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대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논의가 한창이다. 비록 대구의

메가시티 논의는 장기과제로 남았지만, 대전·세종·충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메가시티 구상과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인접한 지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메가시티를 육성해 거점화하고 그 거점에서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때 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함께 발전방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을 두고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돼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수도권과 버금가는 지역의 메가시티가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가?

얼마 전 한 그룹의 신임 리더들을 만났다. 다들 자신이 리더가 됐다는 자부심과 열정에 차 무엇이라도 할 기세였다. 그들은 어떻게 리더 생활을 할지, 어떤 리더상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리더가 돼야 할지 내게 팁을 달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리더 직을 마치고 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라고 물으며 진지하게 답을 고민한 후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여러 답이 나왔다. 변화를 만든 리더, 구성원들을 성장시킨 리더, 관대하고 따뜻한 리더, 회사에 크게 기여한 리더, 조직의 성장을 이끈 리더, 후배에게 좋은 영향을 준 리더, 존경받는 리더 등등.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과만 챙겨 높이 올라가는 리더’,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리더’, ‘소신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리더’, ‘정신없이 자기 일에만 빠져 있는 리더’,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 등의 답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모두 결과를 공유한 뒤 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라고 조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미 정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다짐을 꼭 명심하시고 이를 북극성 삼아 앞으로 리더 생활을 해나가십시오.”라고 말했다.

퇴임한 선배 임원들을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 모두 대개 비슷한 말을 한다. “직원들을 대할 때는 항상 관대한 마음으로 잘해줘라”,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 성과에 급급하지 말라.”

그러나 현장에 있는 리더들은 이러한 교훈을 쉽게 잊는다. 그들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나 책임 속에 매일매일 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때론 의도치 않게 주위 동료들을 경쟁자로 여기거나 구성원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결국 후회로 남을 날들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working backwards”를 강조한다. 뜻을 풀어 해석하면 이렇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무엇인가 이뤄지겠지만 아닌,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결과를 먼저 상상하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그



결과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라는 것. 이는 일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의 기억에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떠올려 보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당신만의 리더상이다. 물론 각자 자신만의 리더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답은 없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위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잠시 숨을 돌리고 아래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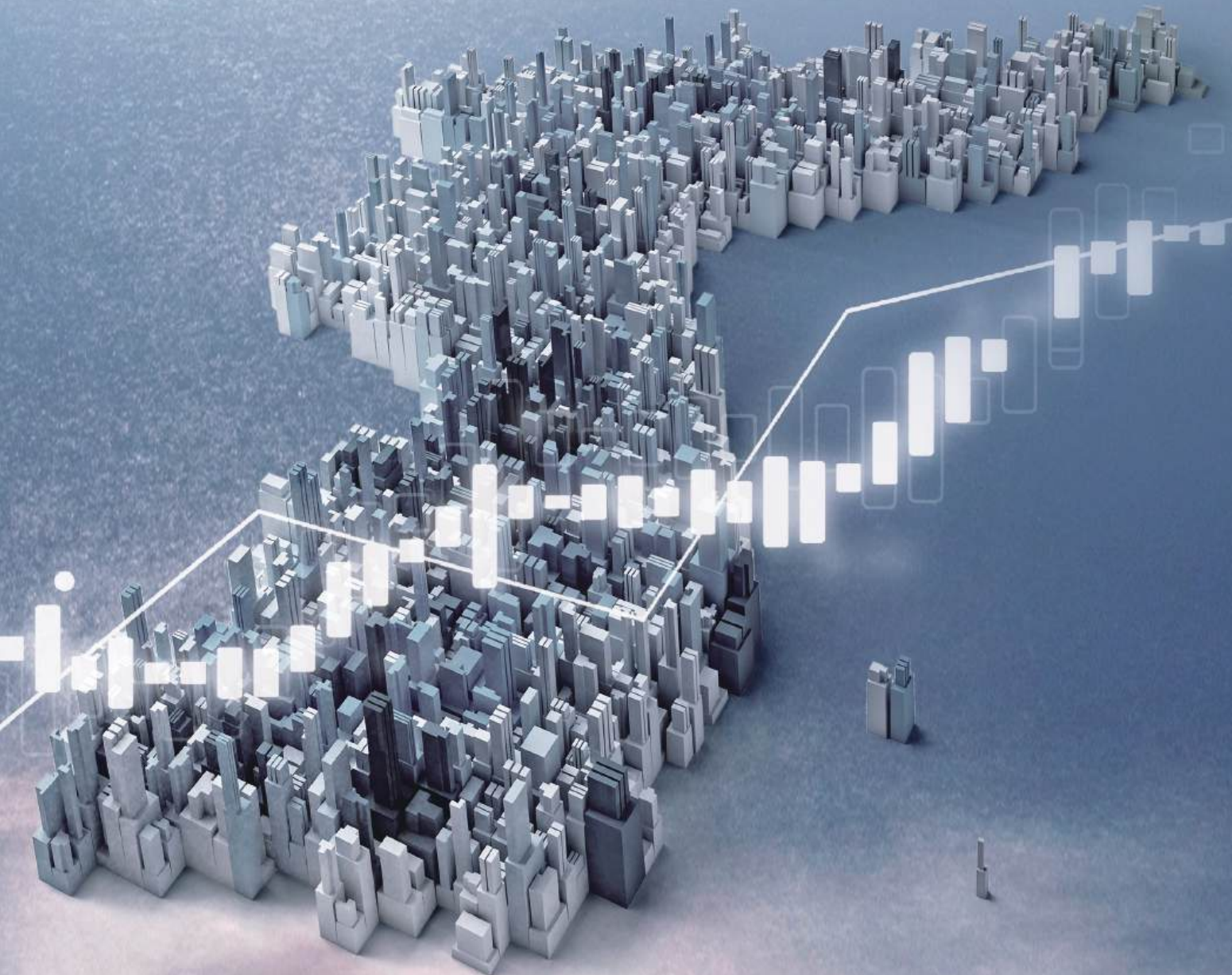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를 마칠 때 당신이 얻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한 후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가?” “언젠가 이 회사에서 퇴임할 때 모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신수정 KT 부사장  
『커넥팅』, 『거인의 리더십』 저자  
sjshin1234@gmail.com

## 인구감소 너머를 생각하다 ⑩ 인구변화 속 기업의 생존전략

인구감소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면서, 기업들은 달라지는 시장 환경과 인력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고객 나아가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내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나라경제』에서 짚어봤다.





## 인구변화발 기업변신, ‘패스트팔로어→퍼스트펍권’

**필요한 건 핵심사업의 주변지점이 던져준 기회 포착이다. 인구변화와 주력산업의 경계 즈음은 훌륭한 보물천지다(옛지전략). 보물을 찾아내 구슬로 꿰는 달라진 혁신실험 중에 인구위기는 매력적인 성장기회로 진화한다.**

시대변화는 전략수정·체질개선을 요구한다. 변화에 맞게 변신한다는 의미다. 적자생존·승자편입의 필수조건이다. 반면 유지는 곧 도태다. 다 함께 흥했던 인플레이션 시대는 현행유지조차 지속가능을 뜻했다. 지금은 아니다. 평균만 해도 먹고살던 시대는 끝났다. ‘디플레이션 vs 스태그플레이션’의 양면카드뿐이다. 벌어도 더 나가는 미스매칭(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덜 벌고 덜 쓰는 축소지향(디플레이션)이 다행일 정도다. 사실상 인구변화 탓이다. 덕분에 고성장 종언과 선진국 진입은 겹친다. 그 공통지점에 전 지구를 놀라킨 한국형 인구변화가 있다. 후속청년이 선택한 ‘저성장·고학력→소득불안·출산포기’의 악순환적인 분업포기를 말한다. 한국만 보면 예고된 인구변화를 멈춰 세울 리셋 불능의 이유도 흘러 넘친다.

그럼에도 ‘위기=기회’다. 인구변화가 위기라는 가면을 쓴 메가트렌드면 누가 언제 올라타느냐로 승부는 정해진다. 위기 속 침몰은 안 된다.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질 수도 없다. 시대변화의 원인·결과인 인구변화의 설명력과 영향권을 주목하는 게 좋다. 인구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독법의 필수카드답게 난제타개로부터 혁신돌파에 이르는 뚜렷한 성공열쇠다. 경험·자산은 많다. 잘하면 인구감소형 성장시스템을 제안할 수도 있다. 노동투입 없이도 성장하는 선진국형 2.0 신자본주의로 제격이다. 1.0이 노동·자본의 요소투입이면 2.0은 인

재·혁신의 성장담론에 가깝다. 전자가 추격수혜를 뜻하는 패스트팔로어라면, 후자는 신질서를 펼쳐낼 퍼스트펍권을 뜻한다. 당장 전통적인 생산인구를 벗어난 고용모델의 변화와 소비욕구를 끌어올릴 새로운 시장조성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 저성장·재정난·인구병의 트릴레마 겪는 한국, 그 위기·기회와 직결된 기업의 역할 절실

정리하면 한국사회는 갈림길에 섰다. 빠르게 압박한 인구변화가 한몫했다. 추격할 직한 선행사례는 없다. 0.72명의 출산율(2023년)처럼 저성장·재정난·인구병의 트릴레마를 겪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선진국조차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목한다. ‘인구감소+지속성장’의 신질서를 펼칠지, ‘선진국→중진국’의 탈락론을 써낼지 유심히 지켜본다. 이제부터는 정확한 분석과 달라진 접근이 필수다. 시대변화에 맞는 구조개혁과 맞물린 패러다임의 재판짜기에 달렸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재구성이 급하다. 사회 전체에 닿는 인구파장을 볼 때 역량·자원의 총동원은 당연지사다. 인구문제의 정부전담은 철 지난 레토릭이다. 새로운 구원투수의 등판시점이다.

유력한 건 기업의 존재·역할이다. 탕평에 맞는 능력발탁은 자연스럽다. 경제는 정치보다 빠르다.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춘 해결사의 등판은 정부실패를 막을 유효방책이다. 기업역량은 파워풀하다. 노동수요·육구실현부터 재정유지·성장동력의 원동력답게 사회유지에 필요한 수많은 자원을 생산·연결하는 공급엔진이다. 무엇보다 인구변화의 이해관계자이자 그 해결의 수혜자다. 위기도 기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이익도 판매에서 나오듯 고객 없는 매출은 없다. 따라서 저출생발 인구감소는 사양경고와 맞물린다. 매출하락·경기침체는 확정된 미래다. 인구가 있어야 기업도 웃는다.



인구변화야말로 미래질서를 규정할 강력·확정된 투입변수다. 저가격·고품질의 경쟁우위형 경영노력은 설 땅이 줄어든다. 시장질서가 달라질 선진국형 축소시장에 적용되기 어렵다. 가성비 소구시대의 종언이다. 승기는 신질서를 제안·장악한 쪽에 쏠린다. 판세를 뒤흔들 강력한 준칙을 움켜쥐란 의미다. 유사사례가 ESG 트렌드에서 확인된다. 돈 벌어 공헌하기보다 문제 자체를 비즈니스로 삼으라는 접근은 기존 질서를 붕괴시켰다. 제 아무리 밸류체인의 가성비를 높여도 신질서와 맞서면 생존할 수 없어서다. 이로써 제2의 수축시장형 뉴노멀을 찾을 때다. 인구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이다. '인구변화=성장도대'란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다 함께 챙기는 훌륭한 묘수일 수밖에 없다.

재편될 미래시장은 '인구위기→인재혁명'에 달렸다. 인구위기를 인재혁명으로 뒤집을 생산성·부가가치 증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고도성장 때의 연공서열·종신고용을 대체해 '채용→임금→승진→퇴직'의 고용시스템부터 뜯어고치자는 의미다. 후속세대의 희생이 전제된 과거방식에서 중립·중도적인 근로형태로의 전환을 뜻한다. 정년제도 개혁과제다. 특정연령의 강제은퇴는 인구보너스일 때 정합적이다. 지금은 이민 증가조차 역부족일 정도로 노동력 감소가 위협적이다. 경력단절 여성처럼 출산·육아로 묻혀버린 인재활용도 새롭게 담아내는 게 필수다. '인구보너스→인재보너스'를 위한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의 전환 활약이 전제된다. 독박육아도 기본전제를 '육아휴직→육아근무'로 전환하면 좋

다. 도농격차의 서울쓸림형 인재론도 자치분권·순환경제와 발맞춘 '굽은나무론'(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속담에서 나온 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으로의 대체가 권유된다. MZ세대에게 불편한 연공주의는 성과주의로 바꿔주는 게 옳다.

#### 데이터 확보 노력으로 축소고객의 평생수요에 주목한 접근법 중요

시장축소는 '복지대응→성장기회'의 역발상으로 해소된다. '최대산업=사회보장'처럼 인구변화발 신행육구의 시장조성이 요구된다. 이는 '제조→서비스'로의 비중변화와 맞물린다. 수출의존에서 내수강화로의 무게이동을 통한 혁신성장이 전제된다. 대표 산업은 블루오션으로 확실시되는 의료·간병·복지다. '최대산업=사회보장'이란 평가처럼 인구변화발 신행육구의 시장재편이 펼쳐진다. 채택전략은 본업경쟁력과 외부파트너의 시너지를 뜻하는 '제조+서비스'의 합종연횡이다. 아마존·쿠팡·카카오처럼 데이터 확보 노력(적자감내)을 통해 축소고객(인구감소)의 전체 편익(평생수요)에 주목한 접근법이 좋다. 당장 손해라도 확장 기회는 많다. 양적인 고객감소의 딜레마를 질적인 수요발굴의 시너지로 커버하는 혁신전략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건 핵심사업의 주변 지점이 던져준 기회 포착이다. 인구변화와 주력산업의 경계 즈음은 훌륭한 보물천지다(엣지전략). 보물을 찾아내 구슬로 꿰는 달라진 혁신실험 중에 인구위기는 매력적인 성장기회로 진화한다. ■



# 미래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에?



## 건설

- 시니어 하우스
- 데이케어센터
- ⋮



## 금융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
- 증여·상속 연계 신탁서비스
- ⋮

## 유통·소비재

- 케어푸드
- 펫코노미
- ⋮



## 레저

- 특정 연령대 특화 콘텐츠 IP(지식재산권)
- 시니어 여가 큐레이션 및 커뮤니티 플랫폼
- ⋮



## 테크

- 가족 케어 돌봄 로봇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디바이스
- 인간 퇴행성 신체 보조 로봇
- ⋮

## 모빌리티

- 로봇택시
- 인캐빈(In-Cabin) 헬스케어\*

\*차량 안 센서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건강을 지키는 솔루션. 일례로 운전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자율주행 등으로 변경.



## 헬스케어

- 난임 치료제
- 시니어 스마트홈 솔루션
- ⋮



주: 저출생·고령화 등 기업 외부 환경(사회·경제·기술) 변화 및 개인별 가치관 변화(개인주의 증가, 가치소비 추구, 노동 효율 중시)에 따른 산업별 유망 섹터(중단기 기준).  
 자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저출생·고령화 인구 대변혁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4.



# “더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 요양서비스 시장이 더 커지길”

김태성 케어링 대표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국내 요양서비스 1위 업체 케어링 김태성 대표를 만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들어봤다.

## 먼저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대상 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인프라 회사로, 현재 약 4만2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등록돼 있고 그중 1만2천 명 정도가 수급자와 매칭돼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약 30개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 노인 돌봄 사업에 뛰어들 계기는?

IT·커피 등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고심하던 중 친한 형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며 자신이 관심 있게 보던 요양서비스 사업을 추천했다. 전혀 모르던 분야였는데 알고 보니 이모랑 고모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고 급여 담합, 퇴직금 미지급 등 이들의 처우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요양서비스는 95%가 개인사업자일 정도로 시장이 파편화돼 있는데 이를 기업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요양보호사들의 니즈를 충족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 요양보호사에 중점을 둔 사업 전략이 독특하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사업의 핵심 구성원이다. 이들이 우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수급자의 만족도도 높아져 결국 더 많은 수급자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했다. 좋은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마진을 최소화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업무 디지털화로 요양보호사들

의 행정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니?

좋은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먼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운영을 선택했다. 요양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서비스 관리가 어려워 단순 서비스 중계로 쉽게 접근하려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는 직접 운영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았다. 또 각 지역에서 탁월한 개인 요양사업자들을 영입했다. 나 같은 IT 사업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과 건강한 충돌을 계속 일으켜 서비스를 최적화해 나갔다.

## 앞으로의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추가 오픈, 방문목욕 차량 확대에 더해 내년에 1~2인실 요양원을 열 계획이다. 우리나라 요양원이 4인실 위주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1~2인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 좀 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타운 사업도 시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양을 넘어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요양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중장년 건강 관리를 돕고 싶다. 산업 전체로는 더 많은 기업이 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해 함께 경쟁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법·제도 보완을 통한 행정 단순화, 산업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

강지은 『나라경제』 편집장

## 데이터 분석, 로봇 등 혁신 기술 제때 활용해 고령화 따른 생산성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은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 따르면, 기업 활동은 생산-물류-판매·서비스에 이르는 주요 활동과 기업 인프라·인재 관리 등 지원 활동으로 나뉜다. 기업들은 생산-물류-판매·서비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D&A(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의 혁신 기술을 통해 생산성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AI와 자동화로 고령화에 대응하며, 인재 관리 부문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AI 더해 근로시간 단축하고 신체 보조 기구 도입해 고령자 작업 효율 높여

첫째, 기업을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술'과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기술과 공간을 활용해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과 몰입감,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AI, D&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로봇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AI를 결합한 기술 혁신에 주목했다. 2018년 미국의 자동화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인 오토메이션에니웨어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Digital Worker 4,000 Project'를 추진했다. 임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4천 명분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결과적으로 RPA(RPA+AI) 기반으로 연간 770만 시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었다.

독일 BMW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 '내일을 위한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외골격 기구인 '의자 없는 의자'를 도입하고, 충격 흡수 바닥 설치, 허리 높이의 컨베이어 벨트와 크레인 장비 구비 등으로 고령 근로자의 작업 효율을 높였다.

둘째, 인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년 근로자 비중이 2002년 30.4%에서 2023년 15.7%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근로자는 13.0%에서 34.7%로 증가했다. 이에 기업들은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과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와 직무 중심 채용 시스템으로의 개선 등 청년층·중장년층,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기술력 저하를 인사 위험으로 인식해 중장년 직원의 전문지식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고, 10대 견습생과의 공동 교육을 운영하며, 유연근무제 및 퇴직자의 단기 프로젝트 채용 등을 추진했다. 일본의 3대 금융그룹 미쓰비시UFJ 은행은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차원에서 여성 직무 만족도 개선과



지난해 11월 16일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생산 라인에서 로봇팔이 아이오닉5 차체를 스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수**  
 삼정KPMG 시니어센터 상무  
 kyungsoopark@kr.kpmg.com



**박도휘**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  
 dohwipark@kr.kpmg.com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전 직원 및 그룹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중장년과 여성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 직원 역량 개발과 퇴직 후 유연근무제로 계속 고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셋째, 생산 부문에서 기업은 인력 부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로봇 활용이다. 스마트팩토리는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최근에는 단순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진화하고 있다.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스마트팩토리의 대표 사례로, 전 과정에 디지털트윈을 구현해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리면서 불량률은 최소화했다. 지멘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했으며 2012년부터 100억 유로 이상을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에 투자했다.

로봇은 노동력을 대체·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며, 제조형(산업용)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제조형 로봇은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에 활용되며,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으로 구분된다. 협동 로봇은 크기가 작고 유연하게 공정을 바꿀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에서 협동 로봇을 자동차 생산 공정의 다양한 작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사족보행 로봇 '스팍'을 공장 안전점검에 투입 중이다. 또한 올해 미국 전기차 공장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비행과 첨단 센싱으로 물류 효율 제고...**

**마케팅에서는 AI 카피라이터가 활약**

넷째, 물류 분야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젊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물류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재고 관리와 작업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AI 기반 수요 예측과 모니터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재고관리 자동화도 도입되고 있다. 첨단 카메라와 로봇운영체제(ROS) 기술이 탑재된 드론은 바코드, QR 코드 등을 인식해 빠르고 정확하게 재고를 관리

하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히타치는 AI와 빅데이터로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AI 분석을 통해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작업 일정 조율을 자동화했다. 무인운반차량(AGV)과 AI 센싱으로 물품 선별·분류를 자동화하고 협동 로봇, 자동 패킹 장비를 도입해 작업을 효율화했다. 또 머신러닝으로 판매 추세를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고 AI 챗봇이 고객 문의를 처리한다.

미국 코버스 로보틱스는 자율비행 드론 '코버스 원(Corvus One)'을 개발해 물류창고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드론은 자율비행과 첨단 센싱 기술을 활용해 물류센터 내 선반과 물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장애물 회피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보장한다.

다섯째, 판매·서비스 단계에서 기업들은 노동력 절약을 위해 자동화·무인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AI 카피라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루이스'나 CJ의 성향맞춤 AI 카피라이터 등이 광고 문구 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업 부문에서는 무인점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들은 AI와 IoT, 센서를 활용한 혁신 매장을 도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객서비스 단계에서는 AICC(AI Contact Center, AI 콜센터)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감정 노동을 줄이고 고객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이소는 AICC를 도입해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인구구조의 대변혁 시대를 맞아 기업은 보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AI, D&A, IoT 등 디지털 기술을 적시에 활용한 스마트화 전략을 구축하고 중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신뢰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으로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가 협업할 수 있는 문화·제도 마련돼야

인구감소 시대 기업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노령인력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노인 친화적 일터 설계와 노령 근로자를 포용하는 다양한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을 대체 혹은 잉여 노동인구라고 생각하는 시대적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미래인재의 보물창고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년 연장과 노인 친화적 일터는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이 선례를 만들고 있지만, 노령인구를 인재의 보고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정책은 글로벌 기업의 관행이다.

최근 미국에서 노령 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MZ세대의 대사직(The Great Resignation,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 거부)과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일터에서 최소한의 일만 수행) 현상 때문이다. L자형 장기 불황 국면에서 그들의 이러한 대사직, 조용한 사직에 시달리다가는 지속적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겠다는 기업의 판단에 은퇴한 X세대나 베이비붐 세

휴비스 전주공장에 채용된 시니어 인턴이 재생섬유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 노하우를 청년 멘티에게 전수하고 있다. ©휴비스 전주공장



대의 재고용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기업이 이들 세대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회사에 충성심이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임금으로 회사의 인력 수급에 커다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한 노인 근로자들은 일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훈련된 세대로, 조그만 불만으로 이직을 결심하지 않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는 워라밸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건강도 개선돼 체력도 젊은이들 못지않다.

기술 발달 또한 고령자들을 일터로 불러들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금은 AI와 로봇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해 전문성이 민주화된 시대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 시대를 이끄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MZ세대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코딩이나 엑셀 등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배우려는 열정과 열린 마음만 있다면 퇴직한 사람도 언제든지 다시 전문적 일자리로 돌아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고난도의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서비스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중장년 재채용 추세가 모든 산업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조짐이다. 이전에도 대기업에 근무하던 퇴직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복귀하거나 휴렛팩커드(HP)에서처럼 은퇴 후 자발적으로 회사의 기업사회공헌(CSR)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혁신이 촉발한 인력의 회귀다.

그러나 노령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나이를 기반으로 한 세대 차이가 회사 내에서 편견과 장애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세대 다양성에 대한 민감도가 개선돼야 한다. 이는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가 협업해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운동장의 정비를 뜻한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의 정년을 다시 결정하는 HR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의 근로자들이 현재와는 맞지 않는 과거의 관행과 성공 비법에서 벗어나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을 할 수 있는 학습센터도 필요하다.

AI와 로봇이 가져온 전문성의 민주화로 운동장만 제공되면 누구나 사무엘 올만의 시 '청춘'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마디로 고령화된 노동력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인재의 보물창고다. **김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민원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보건교육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커졌다.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맞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도 늘리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78.9%)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서툰 한국어 실력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족, 안전교육 부실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1차 전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8월 13일 관계부처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의 정부 지원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빈틈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 기업인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신속 대피와 스마트 안전장비에 재정 지원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과 체험교육으로 교육 효과 ↑

먼저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무리한 진화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 만큼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교육자료를 알기 쉬운 그림 및 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 취약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 비용도 최대 1억 원 지급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산업재해통계 기준 사망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026년에는 폐지할 예정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직업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한 번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특히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에서 발간할 예정인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 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험 교육장(3개소)과 민간 기업의 교육장(200여 개소) 등을 함께 활용한 체험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인력(비전문취업 E-9 비자)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이뤄지는 교육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교육자료도 더욱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 및 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올 11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해당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제공한다. 한편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또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 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지원한다.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산업안전 대진단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후관리 강화**  
셋째,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 이후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 평가 시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해당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곳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도 개편한다. 해당 제도가 단순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인정 후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감면액도 환수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를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안전 수칙인 '4대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①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회·단체, 기업, 지자체 등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든 일터에서 위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용부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시작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지난 9월 12일 충북 제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 담당자 및 통역원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1974juno@korea.kr

# 보험료를 9→13%, 소득대체율 40→42%… 지속가능성, 세대 형평성 고려해 연금개혁 추진

## 연금개혁 추진계획

매일 885억 원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향후 70년의 재정추계를 해보면 기금이 소진된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데 부족한 금액은 2,231조 원이며,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885억 원이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설계됐다. 매월 소득의 3%를 납부하고 퇴직 후 생애 평균소득의 70%를 사망 전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토록 한 것이다. 국민 수용성, 당시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고려된 결과다. 하지만 이런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설계는 저출생·고령화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황이 된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두 차례 실제 개혁이 이뤄졌다.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60세였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조정했다. 2007년 이뤄진 2차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일시에 인하하고 이후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변경했다. 이들 개혁을 통해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9%, 소득대체율 42%, 수급 개시 연령 63세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과 함께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교육·노동·의료와 함께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018년 실시했던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4차 추계 당시 2042년에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각각 1~2년 시기가 앞당겨져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고 기금운용수익률 1%p 올려 재정안정성 확보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현재보다 16년 연장돼 2072년까지 유지 가능**

**다층연금체계 내에서 기능이 미흡했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대폭 개선해 노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4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여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논의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돼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기금운용수익률 1%p 높여 재정안정성 강화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첫째,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재설계다. 우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국민의 수용가능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한다. 2007년 개혁의 취지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중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1%p 높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한다. 기금운용수익은 보험료 수입과 함께 주요한 재정안정 수단이며, 실제 수익률 1%p 상승은 보험료율 2%p 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애초 재정추계 때 장기 수익률을 4.5%로 산정했으나, 내년 1월부터 시

행되는 기준포트폴리오(올해 5월 도입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로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를 통한 자산배분의 유연화와 투자 다변화로 5.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이 현재보다 16년 연장돼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많은 나라가 운영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만약 재정위험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도입되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 천천히 인상...

#### 가입 인정 기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번째 방향은 청년세대 부담 완화와 미래세대 신뢰 확보다. 국민연금은 그간 개혁에 따라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세대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 가입하는 18세의 경우 59세인 가입자와 비교하면 보험료율은 1.64배 높지만 소득대체율은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세대는 더욱이 기금소진과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제도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50대는 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더 구체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법에 명문화해 미래 급여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신뢰를 높이려 한다.

셋째는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국민들의 실질

〈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방안

| 구분             | 50대 | 40대 | 30대  | 20대  |
|----------------|-----|-----|------|------|
| 인상 속도 (%p, 연간) | 1.0 | 0.5 | 0.33 | 0.25 |
| 잔여 납입기간*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13% 인상 기간      | 4년  | 8년  | 12년  | 16년  |

\*세대별로 대표 연령을 설정해 계산(50대: 50세, 20대: 20세).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부터,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내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대상도 납부재개자로 한정된 것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감액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한다. 그간 다층연금체계 내에서 기능이 미흡했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대폭 개선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한다. 또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등으로 수익률도 높여나간다. 노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가입과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익률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개혁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인다. 보험료를 올려 수입을 늘리거나 연금액을 내려 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국민 개인마다 유불리가 달라지며 개혁에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위한 모든 과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 개정 사항이며, 개혁은 법률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다가왔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satorare@korea.kr



# EU는 정말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까?



손효정  
주벨기에EU대사관검주NATO대표부 서기관  
hjson23@mofa.go.kr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13일 연례정책연설에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y investigation)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약 3주 뒤인 10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직권 개시했다.

1년간의 조사는 오는 10월 종결을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7~8월 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방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회람했고 중국 정부와는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수입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EU도 고율 관세 부과 대열에 합류하게 될까?

## 글로벌 친환경 기술 제조강국 꿈꾸는 EU, 중국 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EU 반보조금 조사란 수출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EU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영향을 상쇄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다. 흔히 상계관세 조사라고도 불리며 국제통상법에 따라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 수단이다. EU 반보조금 조사의 법적 근거는 「반보조금법[Regulation(EU) 2016/1037]」으로, 다자통상규범인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EU 반보조금 조사는 통상적으로 EU 업계의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EU 「반보조금법」 제10.8항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EU 집행위가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상계 가능한 보조금의 존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3 국제 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 조사가 가능한 특별한 상황으로 본다. 상계관세는 보통 5년 동안 부과되며 당사자 간 다른 해결책에 합의하는 경우 EU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개시하게 된 특별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EU 집행위의 문제의식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난해 연례정책연설에 잘 드러난다. “풍력부터 철강,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EU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친환경 기술 산업의 미래는 ‘메이드인 유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전기는 친환경경제의 핵심산업이며, 유럽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지금의 EU 집행위(2019~2024년)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 제조 강국을 꿈꿨다. 출범 초기 유럽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2020년 5월)을 발표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EU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후속으로 그린딜 산업계획(2023년 2월), 「기후중립산업법」(2024년 6월 발효), 「핵심원자재법」(2024년 5월 발효) 등을 추진했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EU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기술 제품을 제조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해 EU가 다시 글로벌 친환경산업 리더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산업을 대표하는 분야 중 하나가 전기차산업이다. 특히 EU는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강국이다. EU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자동차의 16%를 생산하고, 자동차 교역으로 약 90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EU 자동차산업은 EU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며 EU 역내 제조업 고용의 8.1%인 약 2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2022년 14%, 2023년 18%였고, 202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향후 전기차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는 EU 친환경산업의 핵심 분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EU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가 전 세계 자동차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1%(1,800만 대)에서 2022년 15%(1,300만 대)로 하락했다. EU의 자동차 수출 또한 2017년 745만 대에서 2022년 626만 대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부상 중이다.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의 3분의 1을 제조하고 있으며, EU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 또한 2017년 11만4천 대에서 2022년 56만천 대로 5배 증가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강자인 EU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2015년 5%에서 2023년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중국 브랜드 비중은 3.7%를 기록했는데 불과 4년 전인 2019년 시장점유율이 0.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하기만은 어렵다.

## 태양광산업의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

###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 상계관세 부과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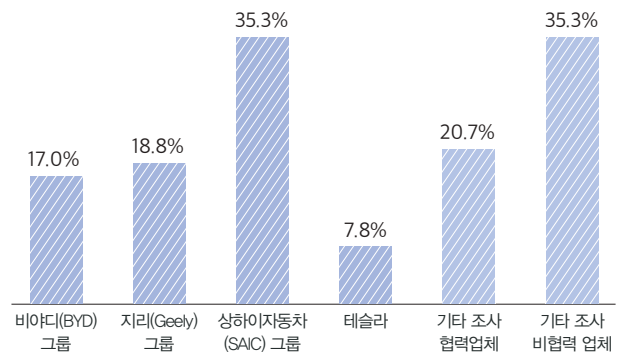
유럽의 전기차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유럽은 이미 태양광산업에서 중국에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빼앗긴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유럽은 태양광산업의 중심이었다. 이후 중국이 서구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체 역량을 구축하면서 현재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95%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IEA, 2023). 이 와중에 태양광 패널의 주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락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유럽 태양광 제조산업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지난 2월 벨기에 브뤼셀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태양광 패널은 와트당 0.26달러인 반면 독일산 태양광 패널은 와트당 0.38달러로 약 40% 더 비싼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업계의 요청으로 태양광 패널, 셀, 웨이퍼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유럽 태양광 제조산업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상호 최저가격 협정이 이뤄지거나 일부 상계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으나 중국의 보복 예고와 EU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속에서 EU는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유럽의 태양광산업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EU 내 평가다. 따라서 EU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급격히 발전한 중국 태양광산업이 초저가 전략으로 공략해 오면서 유럽 태양광산업이 몰락하기에 이른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다.

한편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항상 상계관세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U가 최종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조금의 존재, 실질적인 EU 산업 피해 발생, 보조금과 EU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상계관세 등 최종 조치 부가가 'EU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 간 상호 해결책에 합의하는 경우 EU는

〈그림〉 EU 집행위 최종 상계관세 부과안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2008년부터 이번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전까지 총 431건의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일몰재심 제외)했는데, 이 중 342건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조사였으며 그 중 약 30%가 상계관세 부과 없이 종결된 바 있다.

이번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결과는 어떨까? 지난 8월 20일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상계관세 부과안을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했다. 이 안은 향후 EU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만약 EU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항소위원회 절차가 개시되며, EU 집행위의 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가중다수결(EU 회원국의 55% 이상이 반대하고 해당 국가의 총 인구가 전체 EU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함)를 만족하는 경우 조치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2014~2018년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최종 상계관세는 기존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를 10%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최종 상계관세 부과안이 승인되면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향후 5년간 총 17.8~45.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중장기적으로 차기 EU 집행위와 중국 정부 간 관계와 중국 자동차 업계 대응 및 공급망 지형 변화에 주목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는 10월에 결론이 난다. 향후 관전 포인트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단기적으로 EU가 실제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를 제안했으나 EU·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치 변경 또는 미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WTO에 제소하고 EU산 브랜드·돼지고기·유제품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한편, EU와 대화하며 타협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9월 19일에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 간 회담이 이뤄졌는데, 회담 이후 양측은 향후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최저 수출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 조치를 재검토하는 등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중국 간 논의 결과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중 예정된 EU 27개 회원국의 투표 결과도 관건이다. EU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올해 말 출범할 새 EU 집행위(2024~2029년)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EU는 중국에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9년 이후 EU와 중국의 관계를 기존 경제적 파트너에서 '협력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 및 체제적 라이벌'로 전환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중국에 '디리스크링(de-risking)' 전략을 취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U와 중국은 여전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EU 제1위 수입대상국(EU 역외 수입의 20.6%)이자, 제3위 수출대상국(EU 역외 수출의 8.8%)이며, 중국의 대EU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68억 유로를 기록했다. 그러나 EU와 중국이 상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EU·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EU가 대중국 강경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의 자동차 업계 대응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배터리 등 자동차 관련 부품·제품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자동차 공급망 지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 세계 GDP 3위, 인구 4억4천만 명이 넘는 단일시장 EU는 중국에 매력적인 시장일 것이다. 실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비야디(BYD)는 헝가리에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체리(Chery)는 지난 4월 스페인 이브로-EV 모터스와 협력해 바르셀로나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조, 피아트, 오펜 등 유럽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 또한 지난 5월 중국의 리프모터(Leapmotor)와 협력해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국 자동차 업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또는 대중국 강경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중국 기업은 고율 관세 또는 EU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EU 역내로 제조기지를 이전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 입장에서 중국이 현지에서 EU로 수출하기보다 역내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창출하며 EU 규범을 준수하는 그린필드 투자(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EU와 중국 정부 그리고 업계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향후 EU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대응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 중국이 미국 연준의 ‘빅컷’을 반기는 이유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  
jspark15@korea.kr

미국 연준은 지난 9월 17~18일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빅컷(big cut) 결정에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 특히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주식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2~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투자 심리가 일시적이거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된 미국의 통화정책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해보고자 한다.

## 팬데믹 이후 미중 통화정책 기조 극명하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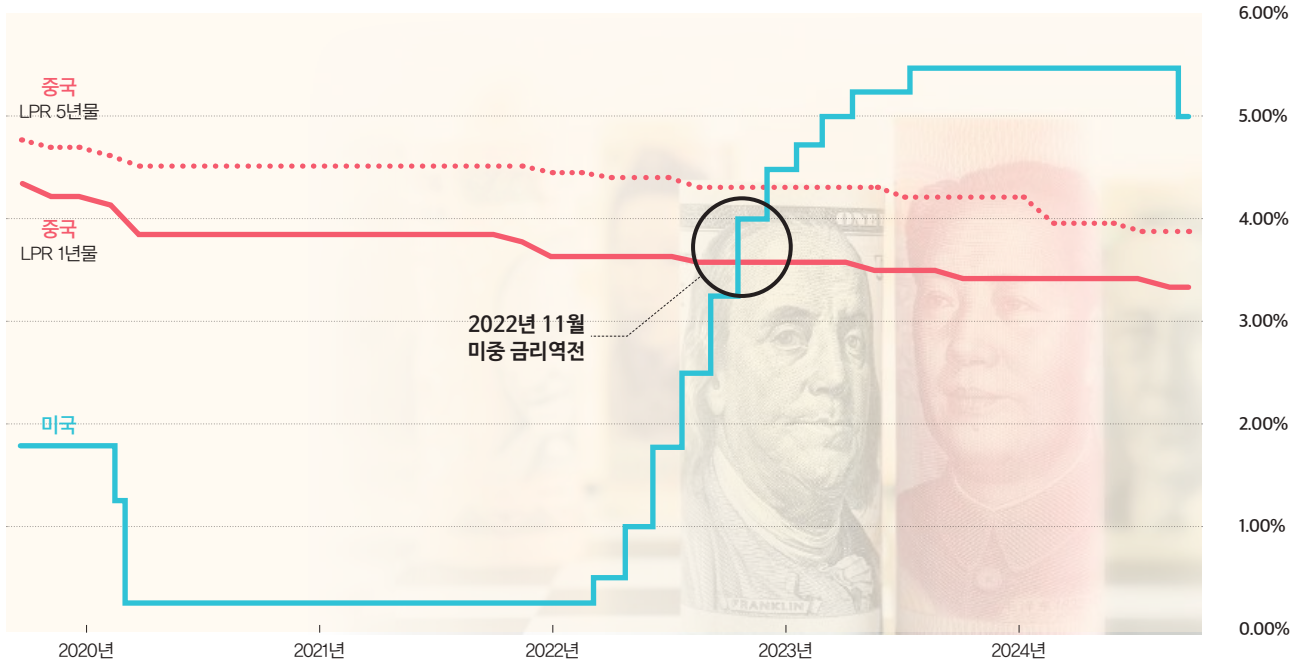
### 이번 빅컷으로 양국 금리 격차 줄며 중국의 부담 경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 중국의 기준금리는 3.35%, 미국은 5.50%(기준금리 폭 상단 기준)로 미국이 중국보다 2.15%p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보통 개도국의 금리가 선진국 금리에 비해 더 높은 것이 정설로 통하는 일반적 시장 상황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소위 미중 간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활용 여지가 크게 축소됐음을



지난 5월 7일 중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중국 베이징 인민은행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 미중 기준금리 추이



자료: 중국 인민은행(PBOC) 홈페이지, Investing.com

의미했다.

사실 중국은 명시적인 '기준금리(Base Rate)'라는 표현 대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1년물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상품에 영향을 주는 LPR 5년물을 가장 중요한 금리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이 글에서 중국 기준금리라 함은 LPR 1년물). 두 금리 지표는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예금지급준비율 지표와 함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돼 있다.

중국 통화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1년물을 비교적 빠르게 4.15%에서 3.85%까지 30bp 인하했으나, 이후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0개월가량 추가 인하 없이 3.85%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가 자국 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3월 중순 1.25%였던 기준금리를 0.25%로 단번에 100bp 인하했고, 이후 2022년 3월 중순까지 약 2년간 사실상의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코로나 시국을 대하는 양국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미국은 2022년 3월 약 2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25bp 인상, 금리인상 주기를 개시하며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통화정책 전환(pivot)을 단행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 17일까지 5.50%에 달하는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며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22년 11월 미국의 기준금리(3.25→4.00%, 75bp↑)가 처음으로 중국의 기준금리(3.65%)를 역전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약 22개월간 미중간 금리역전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 대내적으로 통화정책의 활용 폭 확대하고

### 대외적으로 해외 투자자금 유치 환경 개선할 계기로 환영

중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반가운 데는 대내적으로는 통화정책의 활용 폭을 확대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치 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2022년), 주요국의 긴축 기조(2022년),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2023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투자 수요가 감소했고 이와 관련한 자본 순유출 압력이 지속적으로 우세한 환경이었다.

실제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한 5,802억 위안(약 109조 원)을 기록했고, 2023년 연간 FDI 실적은 전년 대비 8.0%(1조1,300억 위안) 감소했다. 해외 자본의 중국 본토 주식 투자액도 올 2분기 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 107억 달러 대비 약 32%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외국

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하지만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같이 이번 9월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50bp를 추가로 인하하고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하를 몇 번 더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정책금리 운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셈이기에 소위 정책 활용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인 지난 9월 20일 중국 통화당국에서도 중요한 금리결정 회의가 개최됐는데,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기준금리 역할의 LPR 1년물과 5년물 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으나 다수의 시장참여자지는 여전히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하로 올 4분기에 중국도 정책금리를 10bp 인하하고 내년에는 20bp가량 추가 인하할 공간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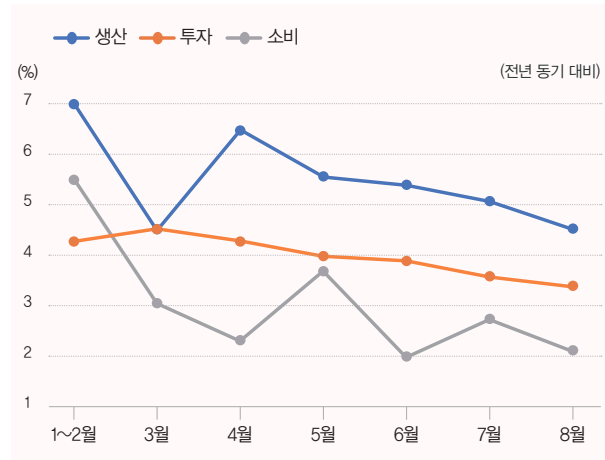
### 경기회복을 위한 중국의 두 날개,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시너지 기대

중국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 등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돼 중국 통화당국으로서는 정책금리를 낮춰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해 재정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자본유출 압력이 더 커지고 이에 따른 위안화 약세, 위안화 자산의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돼 통화정책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제약적 통화정책 환경에서 중국 정부는 주로 재정 정책에 의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 어려워진 배경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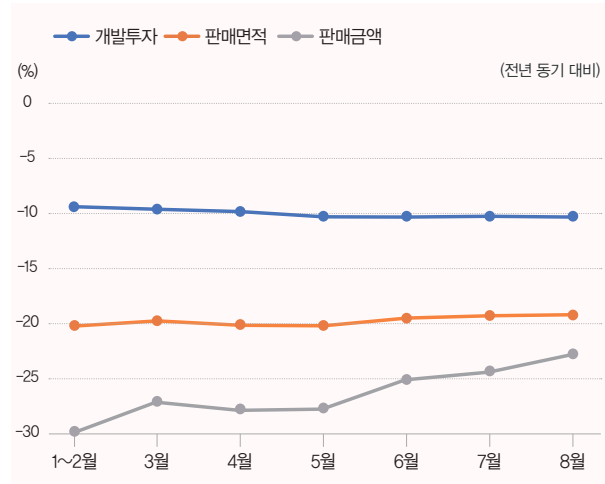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중국경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이와 연동된 민간소비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계자산의 60~70%가 부동산 자산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이 보여준 '투자심리 위축→거래량 감소→자산가격 하락'의 연쇄효과는 개인 차원의 소비도 함께 위축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올해 1~8월 국내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부진한 민간소비 상황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중국 당국의 고민이 어디에 있을지 가능케 한다(그림 2), (그림 3) 참고).

물론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그리고 미중 간 금리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의

〈그림 2〉 2024년 중국 실물경제 주요 지표



〈그림 3〉 2024년 중국 부동산시장 주요 지표



주: 투자(고정자산투자)와 부동산 개발투자는 연내 누적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폭이 확대된다고 해서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한번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현재의 내수외환 상황에서 숨통을 틔우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시행 중인 적극적 재정정책과 결합하면 중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와 중국 기업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 중국 영향이 큰 대만 증시는 2~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바 있다.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 결과로 탄생하는 차기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이번 미국의 금리인하가 중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합치된 의견이자 평가다. ■



# 교육열로 성장하는 베트남, 한류풍을 타고 한국을 따라오다

베트남의 교육열이 심상치 않다. 베트남 외상대(FTU), 외교아카데미, 하노이의대(HMU), 국립경제대(NEU) 등은 이른바 베트남의 명문 대학으로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6월 대입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면 한국 수능일 못지않은 진풍경이 각 학교 앞에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한국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처럼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어학원 APEX, ILA 등 사교육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지난 3월 현지 컨설팅업체 핀그룹(FinGrou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교육비 지출은 5년간 7%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도시 가계소득의 47%가 교육비에 지출되는 등 GDP의 약 5%가 교육 분야에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베트남 주요 도시 가계소득의 47%가 교육비에 지출...

### 1980년대생 젊은 부모들이 뜨거운 교육열 이끌어

최근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하노이의 1인당 연평균 임금소득은 4,860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하노이 유명 영어학원의 1년 수강료가 무려 2,100달러에 이르는데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2만 달러가 넘는 국제학교 수업료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일반 가정은 일찌감치 명문 중학교 입시에 집중하면서 하노이 명문 중학교 입시 경쟁률은 30 대 1을 넘어섰다.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조기교육 열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통상 개별 국가의 교육 수준은 소득·고용 등 한 나라의 거시경제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도 나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간 7.36%, 2.87%, 2.55%, 8.12%, 5.05%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와 맞물려 신분 상승의 욕구 또한 커졌다. 베트남은 외국어 등의 능력을 갖춘 고학력자가 취업시장에 진출하면 연봉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크다. 견고한 사회주의 체제지만 누구나 노력만 하면 지금의 형편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1980년대생 젊은 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거워졌고 이들이 부업으로 개인 판매업 등을 하는 투잡, 쓰리잡도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는 베트남의 경제활동을 주도한 여성들의 강한 생

활력도 한몫한다. 베트남은 과거 전쟁이 잦아 남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성들이 가족을 책임지는 관행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 가정을 이끌어가는 '신모계사회'가 자리 잡았다. 올 초 개봉한 베트남 영화 <마이>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CJ ENM이 투자한 <마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베트남 여성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 고달픈 서사를 집중적으로 그리며 공감을 얻어 베트남 박스오피스 역대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룬 여성들은 문화생활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자연스럽게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이어졌다. 그 영향으로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노이 국립외국어대와 국립하노이대 입시에서 한국어 학과는 전체 어문계 학과 중 입학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노이대의 한국어학과 커트라인은 40점 만점에 36.15점이었으며, 중국어학과와 영어학과의 각각 35.75점, 35.39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어학과의 인기는 한국어 능력이 연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베트남 대졸 초임자가 약 435~650달러를 초봉으로 희망하는 반면, 한국어, 중국어 등 외국어 상급 구사자의 경우 그 1.5배 이상을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베트남 전역 60여 곳에서 2만5천 명 이상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한국어의 인기는 한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하노이의 미딩 국립경기장을 가득 채운 3만여 명의 관객들은 블랙핑크 제니가 베트남 팝 '씨딘(See Tinh)'에 맞춰 춤춤에 크게 환호했다. 이 공연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자 페이스북 북에는 약 49만 원에 달하는 VIP석을 구매하고 싶다는 하노이 중고등학생들의 구매 희망글이 넘쳐났으며, 2일자 공연티켓은 완판돼 3배 비싼 압표가 성행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비율 82.9%를 기록해 조사 대상국 중 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84.7%의 응답자가 '긍정적 변화가 크다'고 답해 그 비율이 조사 대상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문화'라는 말에 베트남 사람들은 K팝 노래와 가수, 한국



지난해 9월 5일 새학기를 맞은 베트남 하노이 한 고등학교 개학식에 참석한 학생들. ©연합뉴스

음식, 드라마와 배우, 삼성 핸드폰 등의 IT 제품, 올리브영 매장의 각종 뷰티 제품 등 전 영역을 떠올린다. 일례로 한국 영화 <파묘>는 올해 베트남 극장에서 누적 관객 수 223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베트남에서 개봉한 외국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다. <파묘>의 인기는 각 가정집에서 재물신(Thần Tài, 떼ن 타이)을 모시는 문화와 맞닿아 있다. 베트남은 불교 12%, 가톨릭 7%로 추산되며,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종교 없이 각 집안에 사당을 모셔놓는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비슷하다.

### 한국과 정서적·역사적 유사성 높아 K컬처에 큰 호감, 경제성장의 모습도 과거 한국과 판박이


베트남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은 이러한 정서적·역사적 유사성의 영향이 크다. 베트남은 오랜 외세 침략의 역사와 장유유사의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강화해 왔다. 1884~1945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으며 1940년에는 일본군이 진입했다. 기원전 111년에서 기원후 938년까지는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침략이라는 한(恨)의 역사를 지닌 한국과 유사하다. 또한 한국에 외세에 맞선 이순신 장군, 안중근 열사 등의 열이 전해진다면 베트남에는 몽골에 맞선 찌흥다오 장군, 민족 영웅 호찌민 주석의 민족정신이 강조된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베트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역사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

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나무 외교'가 탄생했다. 베트남은 신념은 굳게 유지하되 언제든 이익이 될 국가의 손을 잡아 실리를 챙기는 영리한 외교 노선을 구축했다. 또한 견고한 사회주의 체제는 민족결속을 위한 안정적 정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더해 베트남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지난 8월 발표된 컨설팅업체 퍼치 솔루션스의 보고서에서 초중등 교육 완수율 73%, 국민 문해율 95.8%라는 높은

수치로 입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급부상하는 포스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 기지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고금리, 고용 둔화 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약화로 지난해 2.6%에서 올해 2.4%로 둔화될 전망이다 가운데서도 베트남은 독보적인 6%대 성장률과 4% 이내의 물가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1962년 최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해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대체로 매년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73%를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과거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연상케 한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4,285달러로 아직은 한국의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주요 대도시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교육열을 연상케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베트남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30년 후 쯤엔 베트남이 한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음식, 노래, 드라마, 화장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뜨거운 교육열, 무역 중시, 근면성실한 국민성을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성장까지 따라오고 있다. 



김지은  
KOTRA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과장  
jieun@kotra.or.kr



# “열 유니콘 IP라면 유니콘 기업 안 부럽다”

정재식 디오리진 대표

창작과 비즈니스는 늘 각자의 영역으로 존재했다. 어떤 한 장르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 이어서 다른 비즈니스가 개입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다. 디오리진은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적 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를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만들고 있는 국내 외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대중의 관심은 잉겔볼과 같아서 땀감을 계속 채워 넣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진다. 종합콘텐츠 IP 홀딩스 스타트업 디오리진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잉겔볼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피워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페스티벌 기획자로 일할 당시 좋은 기획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과는 딱 한발 앞선 것. 너무 혁신적이면 대중이 낯설어하고, 또 기존 것을 답습하면 외면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익숙한 신선함을 가진 기획. 저에게 혁신과 창의는 먼 훗날 빛날 열 걸음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한 걸음입니다.”

디오리진의 정재식 대표가 생각하는 창의와 혁신이다.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디오리진의 사업 아이템 역시 그동안 대중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이다.

### 익숙한 신선함을 위한 딱 한발 앞선 혁신

“창업하며 멀티유저블 IP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마블이나 스타워즈는 우연한 창발 후 그 세계관을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반대로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세상에 콘텐츠

를 내놓는 것이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미디어 환경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디오리진의 멀티유저블 IP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와 반대 개념이다. 정재식 대표는 OSMU가 허상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용도로 만들어진 소스를 사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항상 목적에 맞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게임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 작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난감해 한 것은 극을 끌고 갈 주인공을 누구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여러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특정 주인공을 강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다른 매체로 확장하기 위해 조율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이었지만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믿고 과감

히 도전했다. 여기에 영화 <설국열차>, <괴물>의 콘셉트 아티스트, 아시아 최초 일렉트로닉아츠(EA)사 게임 프로젝트 총괄 아트디렉터 경력을 보유한 조민수 감독의 합류는 디오리진을 시작할 충분한 이유가 됐다. '크리에이터의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조 감독은 디오리진의 공동창업자로 함께했다.

멀티유저블 IP 사업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 능력과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사업 능력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이 두 영역은 굉장히 이질적이기에 둘 모두를 진행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재식 대표는 스스로를 완벽한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전문사업가도 아닌 중간 그 어디쯤에 있다고 느끼며 살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2021년 5월 디오리진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며 3년이 고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항상 디오리진은 어떤 회사인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멀티유저블 IP라는 DNA를 세상에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곧 추수의 시기가 옵니다. 웹툰, 웹소설, 드라마 스펀오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방면의 미디어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묵묵히 씨 뿌리던 시기를 지나 드디어 결실을 확인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디오리진은 현재 STUDIO X+U와 손잡고 기획한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의 '미스터 스마일(허광한 분) 캐릭터 스펀오프 IP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팬덤을 가진 대만의 허광한 배우가 연기한 미스터 스마일을 새로운 세계관과 스토리로 재창조하고 이를 활용한 스펀오프 시리즈를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IP를 다매체로 확산하며 무수히 확장된 미스터 스마일을 선보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팬덤 확보를 노린다. 정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에 없던 멀티유저블 IP 사업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오리진이 창조하는 멀티유저블 IP의 세계

디오리진은 AI 기술에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는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멀티유저블 IP 창작 영역의 유연성을 높이고 작가들은 핵심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창작과 창발의 영역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미지의 블랙박스 아닙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창작을 끌어내고, 확대 완성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핵심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는 과정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제작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 모두 가능하지만 특히 웹툰 창작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탁월하죠. IP별로 모델을 튜닝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후공정 작업은 AI가 진행합니다. 앞으로 AI 제작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애니메이션 제작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오리진의 AI 제작 시스템은 사람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닌 공정 부분의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1년에 6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라인업을 더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디오리진은 캐릭터와 상황을 넣으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창작 관련 AI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누구나 즐겁게 갖고 놀 수 있는 창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AI 기술로 상황에 맞게 캐릭터와 연기를 주고받으며 호감도를 쌓고, 관계가 깊어지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와 함께 대화에 맞춰 그림도 생성되고요, 그렇게 자신만의 시나리오나 소설을 완성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식 대표의 명함에는 "10 unicorn IPs rather than a unicorn company"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의 목표는 1조 원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과 같은 IP 미디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다.

"디즈니가 마블과 루카스 필름(스타워즈 제작사)을 각각 약 5조2천억 원, 4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 사례를 보며 미디어 프랜차이즈에도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디오리진이 유니콘 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니콘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미디어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식 대표는 유니콘의 가치를 가진 IP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와 IP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팬을 보유한 사랑받는 콘텐츠를 비로소 IP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질은 대중의 사랑이며, 디오리진의 최종 목표 역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IP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디오리진의 활약을 통해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불멸의 콘텐츠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

글 · 이재영 듣고 쓰는 사람 soulcopy@empas.com

# 플라잉 카가 날아다니면 행복할까?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옛사람 티 내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20세기에 나온 SF 영화 가운데 <백 투 더 퓨처> 시리즈가 있다. 1985년, 1989년, 1990년 세 편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1편의 주인공 마티(마이클 J. 폭스)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은 지금 봐도 흥미진진하다.

<백 투 더 퓨처 2>에서는 주인공이 1985년에서 2015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 활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실제로 2015년 10월 21일엔 <백 투 더 퓨처 2>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주인공이 30년 뒤 미래로 간 날짜가 바로 2015년 10월 21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영화와 비교하면 현실은 초라하다.

예를 들어 비가 언제 오고 그칠지를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기예보는 2015년은커녕 2024년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내가 만난 한 대기과학자는 “3일 뒤 날씨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니, 정확한 날씨 예측을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 ‘호버보드(hoverboard)’도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영화 속 2015년 모습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1세기가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대중화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답답한 도로정체는 2024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2035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세계 곳곳의 여러 기업이 ‘플라잉 카(flying car)’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백 투 더 퓨처 1>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한 플라잉 카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날개가 붙어 있는 형태다.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플라잉 카를 슬로

바키아 기업 클라인버전이 개발했다. 약 3분 안에 날개가 나와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변신하는 이 플라잉 카는 75킬로미터를 약 30분 만에 날아서 이동한다.

현재 이 기업은 중국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를 모색 중이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 플라잉 카가 도심의 도로와 하늘을 누빌 가능성은 작다. 바로 활주로 때문이다. 이 플라잉 카는 수직이착륙을 할 수 없어서 앞이 트인 약 300미터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라. 차들로 가득 찬 서울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활주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나.

##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5분?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업이 관심을 두는, 도시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플라잉 카를 요즘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도시를 비행하는 이동수단이다. UAM은 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덩치가 큰 드론에 가깝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로 움직이는 이 플라잉 카를 흔히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지칭한다. 보통 5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eVTOL은 따로 조종사가 타지 않아도 된다. 드론처럼 원격조종을 하거나 좌표를 알아서 찾아가는 자동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UAM 플라잉 카 모델 ‘S-A2’가 대표적인 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S-A2 역시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다. 400~500미터의 고도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해 약 60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로 서울 서쪽의 김포공항에서 동쪽의 잠실까지 34킬로미터를 출퇴근 시간대에 이동하려면 보통 약 73분이 걸린



다. 그런데 S-A2 같은 플라잉 카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직선거리 27킬로미터를 약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교통량이 도로와 하늘로 분산되니 도심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GM, 포르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지리자동차 등도 보잉·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와 손잡고 UAM 플라잉 카 사업을 준비 중이다. 100년 이상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 교통에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정말로 영화처럼 플라잉 카가 2030년쯤이면 현실에 등장할까.

낙관하기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우선 접근성이 문제다. UAM을 운영하려면 승객이 타고 내리고 플라잉 카가 수직 이착륙할 터미널이 필요하다. 집이나 회사에서 터미널까지 오가는 거리가 멀고, 또 그곳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다면 어떨까. 집에서 터미널까지 30분, 대기 시간 20분, 터미널에서 회사까지 10분이 걸린다면 이동 시간 60분이 줄어도 출근 시간은 똑같다.

서울 한강을 오가는 수상택시와 플라잉 카를 비교해 보자. 2007년 10월 한강 수상택시는 ‘교통체증 없는, 15분 내 주파’를 내세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17년 동안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매년 적자만 쌓이다가 한때 운항 포기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시민에게 외면당했다. (2024년 10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다시 ‘한강 리버 버스’를 도입한다.)

이유는 뻘뻘했다. 수상택시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선착장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가령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에서 영등포구 여의나루역까지 출퇴근 시간대

에 자동차로는 약 1시간이 걸린다. 수상택시를 타면 이동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한데 집에서 선착장까지 20분, 또 선착장에서 회사까지 20분이 소요되면 수상택시를 타는 이점이 없어진다. 플라잉 카는 다를까?

UAM 플라잉 카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안전이다. 승객을 싣고 도심을 나는 플라잉 카가 만에 하나 사고를 낸다면 심각한 피해를 낼 수 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 사고가 그렇듯이 승객의 생명이 위험할 뿐 아니라 지상의 시민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안개, 미세먼지, 뇌우,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헬리콥터 운항 사고는 플라잉 카 비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UAM 플라잉 카가 빠르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더라도 요금이 비싸면 부유한 사람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플라잉 카로 출퇴근 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될 때 소득과 상관없이 평균 7,500원 정도를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도시를 ‘다르게’ 상상하는 일

이 대목에서 고약한 질문을 던져보자. 오늘의 주인공 UAM 플라잉 카, 앞서 살펴본 한강 수상택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GTX 등이 나오게 된 공통 배경이 있다. 바로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그간 수도권이 지속해서 팽창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환경이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집과 회사 사이의 수십 킬로미터를 평균 1시간 넘게 배, 열차, 플라잉 카 등을 타고서 움직이는 일이, 다시 말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온실기체를 배출하며 이동하는 일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일까. 걷거나 자전거 등을 타고서 30분 안에 집과 회사를 오갈 수 있는 도시는 정말 상상 속의 유토피아일 뿐일까.

아침 8시쯤 집에서 나와 천천히 30분 정도 걷거나 자전거·킥보드를 타고 직장엔 출근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가 ‘플라잉 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일 수도 있다. 어쩌면 플라잉 카가 날아다니는 1980년대 영화 속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할 수십 년 된 낡은 상상력이 아닐까. ■

# 삶의 질 어떻게 측정할까?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사회발전 측정의 주요 목표였으나 최근 들어 국민 삶의 질 개선이나 행복 증진이 사회발전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정책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측정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건강, 소득 등 11개 영역 7개 지표로 국민 삶의 질 지표 선정

그렇다면 삶의 질이나 행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또는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할 것이다. 그만큼 삶의 질이나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행복이 '개인이 느끼는 정서경험 중 행복한 감정'이라면 삶의 질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삶의 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라고 정의한다. 개인별로 다른 삶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 소득 등 개인 삶에 중요한 11개 영역, 7개 지표로 측정한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수치의 증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기 대비 개선, 악화, 동일로 최근 변화추세를 제시하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전체 7개 지표의 최근 추세는 <그림>과 같다. 11개 영역 중 고용·임금, 시민참여와 안전 영역은 최근 악화된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환경, 여가, 주거 영역은 개선된 지표가 많다.

개별 지표로 보면 최근 삶의 질 변화 추세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고 개인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외부활동 제한일 것이며 여가 영역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1인당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는 2020년과 2021년에 2019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시민참여 영역의 자원봉사 참여율 또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외부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코로나19가 끝나가는 2022~2023년에 걸쳐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개인 삶은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보통 33~34% 정도였던 비만율(건강 영역)이 2020년 38.3%로 급격히 증가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가족·공동체 영역) 또한 2019년 27.7%에서 2021년 34.1%로 증가했다. 비만율과 사회적 고립도 모두 급격한 증가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와는 차이가 있어 일상에서의 변화와 회복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인 삶의 만족도 지표(주관적 웰빙 영역)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0점으로 2019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에는 6.3점, 2022년은 6.5점으로 가장 높았다(2023년은 6.4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2020년에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후 일상이 회복되며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국제적인 행복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삶의 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라고 정의한다.

〈그림〉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2024년 6월 기준)

🟢 개선 🟡 악화 🟠 동일  
\* 표시된 지표는 2023년 값이 반영.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시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 코로나 영향 없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등교 후 오히려 감소**

코로나19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여가 영역에서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1년 27.0%로 2019년 28.8%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2023년에는 34.3%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여가활동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은 증가(2019년 4.0시간 → 2020년 4.2시간 → 2021년 4.4시간)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OTT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여가활동 등 변화된 여가생활에 적응한 결과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교육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

쳤다. 등교중지 및 원격수업 실시, 체험활동 제한과 같은 조치는 학력격차 심화,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동반했다. 이 시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를 살펴보면 등교중지와 원격수업 일수가 가장 많던 2020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59.3%로 2018년 58.0%보다 증가했으며 전면등교로 전환된 2022년에는 51.1%로 감소했다. 학생들이 경험한 등교중지와 원격수업 등의 변화에 자유시간의 증가, 학교폭력 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의 변화와 삶의 질을 일부 지표로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동일하지 않았고 변화로 인한

개인의 만족도 또한 상이했다. 지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 증가는 달리 자녀를 돌보아야 했던 학부모들의 만족도나 대학 신입생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체 국민의 삶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면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 청년, 고령 등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지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shimsj@korea.kr

# 칠레, 디지털 기술 활용해 장시간 병원 대기때 따른 죽음 막는다

지난해 6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로부터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한 주민이 폐렴 증세를 보이는 생후 3개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병원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 아이는 결국 치료 받지 못하고 사망했고 이 소식을 들은 칠레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칠레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비극적 사례처럼 병원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사망한 환자가 무려 1만477명에 달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칠레의 보건의료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지만 남북으로 길고 가늘게 뻗어 있는 지리적 특성,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칠레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6명에 비해 부족하다.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또한 2.0개로 OECD 평균인 4.5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칠레 국민이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병상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급증했다. 외과 및 일반 진료 역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자 수가 누적됐고, 특히 수술과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병원 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대기 환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낮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칠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 보건의료체계 미비, 관련 인프라 및 경험 부족으로 한국의 경험과 지식 공유 요청

칠레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보

건 및 의료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할 시스템이 부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해 세밀한 정책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칠레 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받기를 원했다.

한국 정부는 칠레의 요청에 응답해 '2023~2024년 칠레 KSP'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칠레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대주제와 세부 주제를 선정했고, 사업 착수 전 칠레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분야를 논의했다.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칠레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대주제로 정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도입', 'IT 기술을 활용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질적 향상', '1~3차 의료기관 협업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대기 환자 감축 및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 공개 입찰을 통해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본부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1일 한국 연구진이 현지 조사차 방문한 산티아고 루이스 바르가스 살세도 국립학교에서 칠레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필자 제공



첫 번째 세부 주제인 질병 예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도입은 칠레에 만성질환 관련 사망자가 많고 만성질환 환자 수 역시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칠레는 지역사회 생활 현장에서 만성질환 관리군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지 학교와 직장의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했고, 한국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강북삼성병원의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EAP)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현지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산티아고에 있는 루이스 바르가스 살세도(Luis Vargas Salcedo) 공립학교 등 학교와 직장을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학교와 직장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계획을 도출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대기 환자가 크게 늘고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하는 현상이 공공 의료접근성을 저하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었다. 산티아고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 1차 의료기관인 세스팜(CESFAM)에 방문해 의료 환경을 조사했고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토의해 만성질환자 관리 모델을 설계했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도출했다. 또 환자, 상병 분류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칠레의 80가지 중증 질환에 대한 무상 의료서비스인 국가 필수의료 보장 프로그램(AUGE-GES) 적용 의뢰서의 용어 표준화·전산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 쏠림은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난 3월 27일 칠레의 정책 실무자들이 서울의 한 의원을 방문해 1차 의료기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하고 있다.  
©필자 제공



의료 공급 모형을 다변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1~3차 의료기관 협업 시스템 효율화로 대기 환자를 감축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세부 주제는 특히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칠레 보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 상호운용성 강화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련 법제화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 의료 정보 국가 표준 및 인증 사례, 한국 의료기관의 환자 예약 시스템, 의료 용어 및 데이터 표준화, 보건복지부의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 등을 소개해 의료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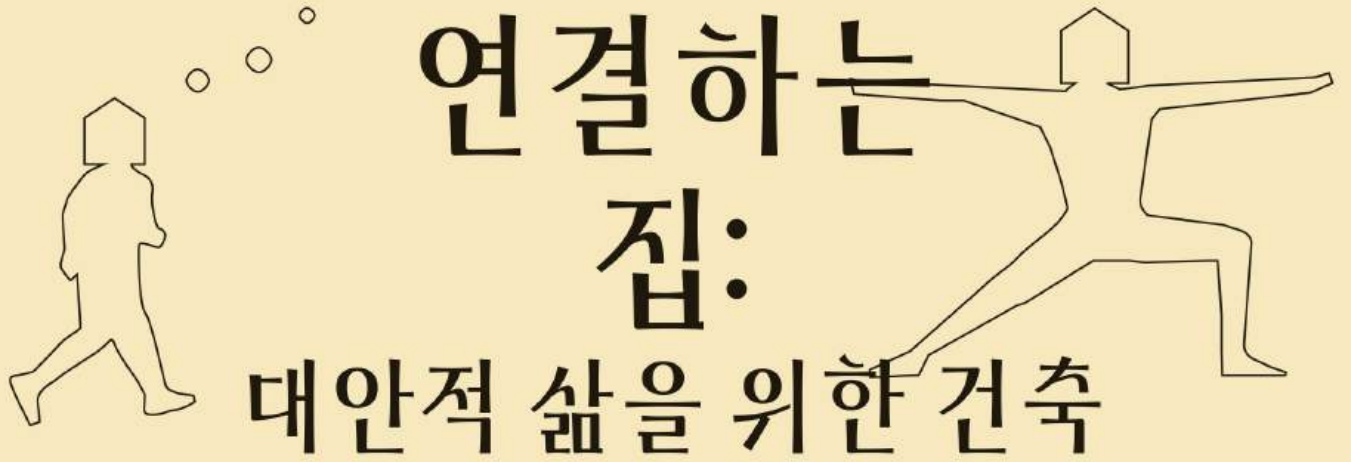
이 내용들은 지난 6월 최종 정책제언으로 칠레 정부에 전달됐다. 칠레 보건부 오스발도 살가도(Osvaldo Salgado)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번 KSP 사업에 관심이 크며 후속 KSP 사업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인프라 개선, 인력 충원, 법·제도 개선 동반돼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자원의 제약으로 동시에 충족되지 못하는 '보건 의료 철의 삼각' 문제를 해결할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칠레 정부도 이 기술을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의료 비용 문제를 고려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며, 전문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관련 법과 제도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칠레 KSP 사업에서는 단순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칠레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 칠레 국민이 병원에서 대기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길 희망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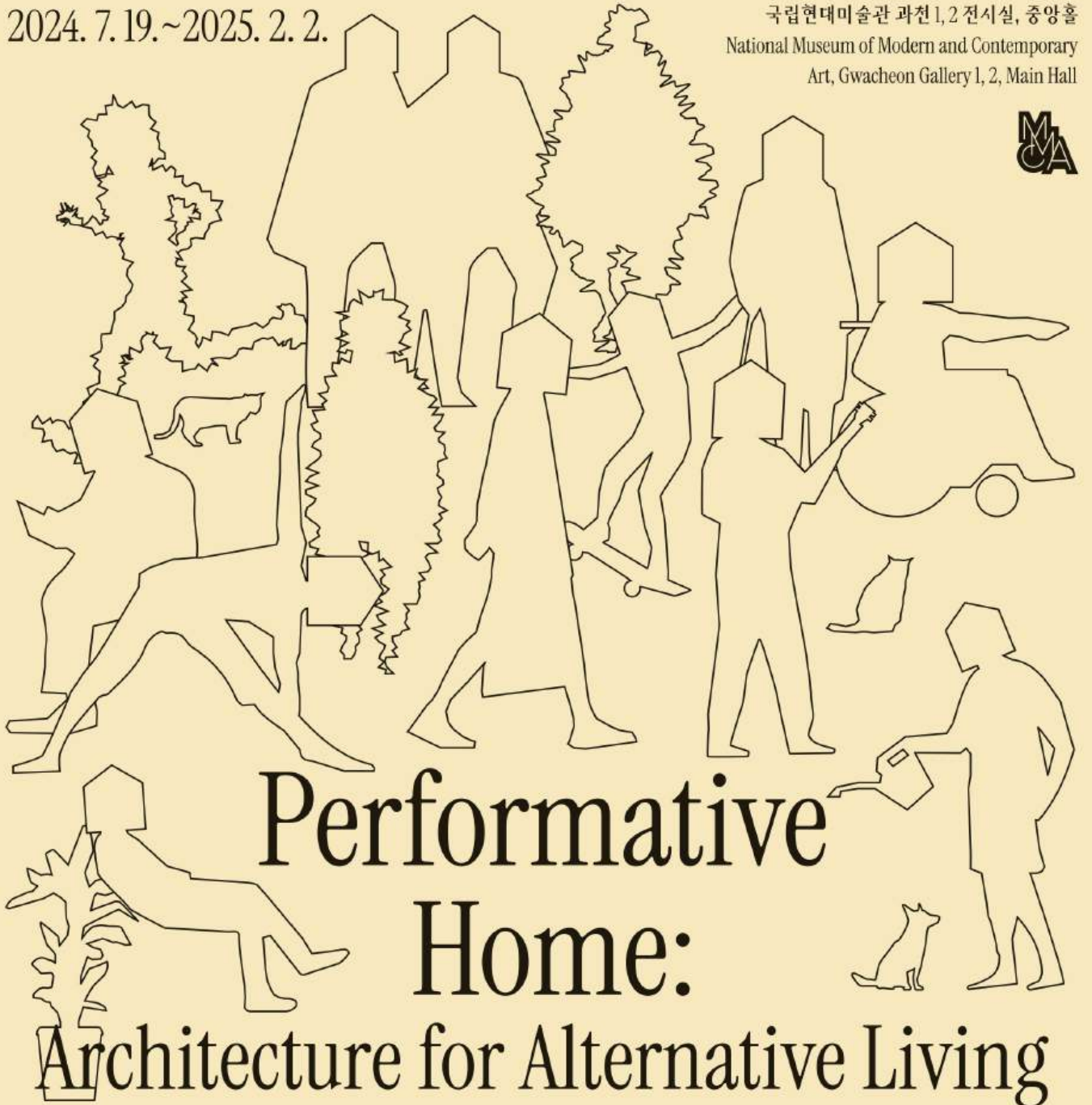
홍기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연구원  
doublehk8272@kdi.re.kr



#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

2024. 7. 19. ~ 2025. 2. 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 2 전시실, 중앙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allery 1, 2, Main Hall



뮤지션이 공연 기획의도에 맞춰 구성한 곡 목록 '셋리스트'.  
음악평론가 배순탁이 뽑은 이달의 셋리스트를 눈으로 들어보자.

#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솔로 가수



가수 윤하가 지난 2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서 노래하고 있다. ©C9엔터테인먼트

최고의 솔로 가수를 꼽으라면 누구의 이름이 거론될까. 여러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이 가수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 찬사를 보냈던 2007년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다. 바로 윤하다.

2007년 윤하를 알린 노래는 제목도 생소한 '비밀번호 486'이었다. 장르를 따지자면 피아노

록, 통통 튀는 피아노 선율 위로 흐르는 윤하의 긍정적이고 에너지틱한 분위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휩쓸렸다. 기실 윤하의 재능은 일본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한국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중 일본에서 먼저 러브콜이 왔고 꽤 성공을 거뒀다.

기억해야 한다. 2007년이였다. BTS를 위시한 K팝의 미국 진출이 다가오려면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은 때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은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정점을 찍은 보아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몰렸던 이유다. 바로 이 성취를 한국에서는 제대로 활동해 본 적도 없는 윤하라는 가수가 해냈다.

한국에서 윤하의 일본 활동기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조금씩 주목받았다. 이후 몇 곡이 나왔고 '비밀번호 486'이 윤하의 인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당시에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여성 로커였다는 점, 기타가 아닌 피아노로 록을 하는 드문 케이스라는 점 등이 이른바 '윤하' 현상을 불러온 기폭제였다.

참고로 곡 제목의 486은 가사에도 나오듯이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 키스해 달라는 뜻이다. '사랑해'의 글자 획수를 풀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윤하는 자신의 성격과는 크게 맞

지는 않는 노래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하는 자신의 커리어를 제법 탄탄하게 구축했다. '비밀번호 486'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혜성', 발라드에도 일가견이 있음을 보여준 '오늘 헤어졌어요' 등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곡들이다. 물론 록과 발라드 일색이었던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오르 트구름' 같은 경우 무려 컨트리 리프를 도입해 히트했는데 이것은 컨트리 장르가 유독 약세인 한국에서 절대 쉽지 않은 성취다.

이 외에 '나는 계획이 있다'에서는 일렉트로닉을, 2022년을 강타한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천문학을 일상적인 가사로 풀어내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사건의 지평선'은 발매 초기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꾸준한 라이브 활동을 통해 결국 가요 순위 프로그램과 스트리밍 차트 모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노래이기도 하다. 얼마 전 독창적인 노랫말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윤하는 음악적 품이 넓은 만큼 피쳐링 가수로도 히트곡을 여러 발표했다. 에픽 하이와 함께 한 '우산'과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종일 맑음'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외에 윤도현, 나얼, 린, 임재범, 에피톤 프로젝트 등이 윤하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동료들로부터도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실 내가 가장 애정하는 윤하의 음반은 따로 있다. 바로 2012년 발매한 4집 <Supersonic>이다. 이 음반에서는 '소나기'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내 원픽은 타이틀 'Supersonic'이다. 장담할 수 있다. 최근 재결성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오아시스의 'Supersonic'만큼이나 매력적인 노래다. 윤하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헤비하면서도 탁월한 록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01 Parade     | 07 오늘 헤어졌어요      |
| 02 태양물고기      | 08 비가 내리는 날에는    |
| 03 기다리다       | 09 우산            |
| 04 오르트구름      | 10 혜성            |
| 05 Supersonic | 11 (앙코르) 사건의 지평선 |
| 06 크림소스 파스타   |                  |



배순탁 음악평론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greattak@hanmail.net

정여울의 나란히 한 걸음

# 장엄함과 숭고함 앞에서 비로소 겸허해지는 마음

영국 스톤헨지

# Stonehenge



모아이 석상, 버뮤다 삼각지 등과 함께 전 세계 10대 미스터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스톤헨지. 스톤헨지를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며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들여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신비한 미스터리로 가득한 공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곳에 가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점이다. 합리적 설명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엄함과 신비 자체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마추픽추에 갔을 때도, 네스호에 갔을 때도, 이과수 폭포에 갔을 때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그곳에 가면 그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고, 사진으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장엄한 기운에 놀라 어안이 병병해지면서,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입이 다물어진다. 미미한 존재여서 슬픈 것이 아니라, 미미한 존재라서 다행이고, 고맙고, 무한한 축복인 듯 느껴지는 것이다.

###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들

나는 이 장엄한 존재들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기 위해 너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평소의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노력과 갈망이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나'를 존중하면서도, '이곳에서는 그냥 작고, 힘없는 나로 충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고,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스톤헨지의 돌덩어리 하나도 들어 올릴 수 없음을 새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엄하고 숭고한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며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샘솟는다.

스톤헨지가 자리하고 있는 영국 솔즈베리 평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치유와 돌봄의 길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방문한 당일 비가 왔음에도 사람들은 스톤헨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비 오는 흙길을 묵묵히 걸어가 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10여 년 전 스톤헨지에 처음 갔을 때는 솔즈베리역을 거쳐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이번에는 런던에서 출발하는 단체 투어 패키지를 이용했다. 런던-스톤헨지-코츠월즈-옥스퍼드 투어 코스가 가장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서 그곳을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나에게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았다. 솔즈베리의 캔터베리 대성당을 둘러보고 스톤헨지를 보고 오는 하루 코스가 그 '장엄함과 숭고함'을 훨씬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여행이었다.

처음 스톤헨지에 가는 사람들은 다소 어안이 병병할 수도 있다. '이 거대한 돌무더기를 보려고 그 머나먼 길을 고생해서 온 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알 수 없는 장엄한 기운에 기분 좋게 휩쓸리게 된다. 뭔가 대단





스톤헨지를 방문하기 위한 관문 중 하나인 슬즈베리 기차역.

한 것을 보려고만 하는 관광객의 욕심이 가라앉으면서, 무려 5천여 년 전에 이 무겁디무거운 돌을 옮기며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빌기도 했을 옛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슬픔과 문득 '연결되는 느낌'에 놀라게 된다.

숭고함과 장엄함을 간직한 공간들 앞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다. 바로 '간절한 기도의 행렬'이다. 아직도 스톤헨지에 대한 별의별 추측이 난무하고,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는 몸짓을 보여준다. 여행자들은 스톤헨지에서 불현듯 순례자로 변신한다. 전 세계에서 스톤헨지를 보러 온 여행자들은 어느덧 기도하러 가는 순례자의 행렬처럼 스톤헨지 주변을 조용히 돌며 소원을 빌고 있었다.

### 기도하는 마음의 공동체

평생 어떤 종교도 선택하지 못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소원을 빌기 시작한다. 그래도 따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짓는다. '그래, 이 아름다운 스톤헨지를 만든 것은, 그들 각자가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였을 거야.' 누구도 '그렇다, 바로 기도를 위해서다'라고 진실의 증치부를 찍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탑돌이 하듯 스톤헨지를 뱅뱅 돌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찾아낸 것이 아닐까.

저 장엄한 스톤헨지 앞에서, 누군가는 춤을 출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남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다. 타인의 이목을 지나치게 끌지 않고 조용히 각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 아닐까. 무언가를 간절히 표현하면서도 표현한다는 과도한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간절히 무언가를 말하지만, 꼭 무언가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다.

표현하면서도 표현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행위, 말을 하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는 몸짓, 그것이 기도의 아름다움임을 깨달았다. 아무런 종교가 없지만 이런 곳에 오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심정'이 되는 나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됐다. 사실 이런 곳에 오지 않아도 힘겨울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에 빠지지만, 스톤헨지 같은 곳은 마치 모두가 모여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저마다의 언어를 뛰어넘어, 저마다의 종교를 뛰어



스톤헨지로 가는 길, 슬즈베리 평원을 걷는 여행자들. ©이승원 작가



슬즈베리의 캔터베리 대성당.

넘어, 저마다의 상황과 사연조차 뛰어넘어 '기도하는 마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 같아 더욱 감격스러웠다.

나는 원래 사진이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곳에선 나도 모르게 셀카를 찍고 있었다. 스톤헨지에 와서 이렇게 장엄한 감동의 시간을 느꼈다는 사실만은 어떻게든 기억하고 싶었나 보다. 멀리서 스톤헨지를 마치 미니어처처럼 손바닥에 올려놓는 듯한 재미있는 착시 사진을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금발의 중년 여성이 나를 애뜻하게 바라보며 "내가 사진을 찍어줄까요?"라고 묻는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어떻게든 셀카를 찍겠다고 애를 쓰는 내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내 서툰 셀카 욕망을 들켜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성 들여 사진을 찍어주고는 따스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곁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그녀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지고 나자 문득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걸.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못내 후회가 밀려왔다. 당신은 스톤헨지를 왜 좋아하냐고, 당신에게 스톤헨지는 어떤 의미냐고, 그런 것들을 묻고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 아쉬운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에 실어 보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나를 위해 사진을 찍어준 그녀가 내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이 낯선 우주에서 불가해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가 저마다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은 이렇게 생면부지의 타인까지도 친밀하고 따사로운 인연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준다. ■

글 · 정여울 『감수성 수업』,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 오픈마켓 플랫폼의 명암

오픈마켓 플랫폼이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서비스 운영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며 중개자의 역할만 하는 e커머스 형태다. 거래가 발생하면 오픈마켓 운영사는 상품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이용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가 플랫폼의 주요 수익을 담당하게 된다.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감소하게 된다. 상품 비교가 용이하므로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군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촉 비용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용한 유통산업은 급성장했다. 1994년에 설립돼 미국 온라인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유통업계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한 세계 최대의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 아마존과 이듬해에 설립된 이베이를 필두로 각국의 오픈마켓 플랫폼시장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오픈마켓 선두 주자는 쿠팡이다. 원래는 소셜커머스로 시작했지만 2015년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2022년 거래액이 네이버를 추월하고 2023년에는 매출이 이마트를 넘어서는 등 흑자 전환하면서 국내 유통업계 1위로 우뚝 올랐다. 그 당시 유통업계에서 회자되던 얘기가 '쿠팡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다른 플랫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였다. 업계의 속성상 거대 플랫폼 외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중국 오픈마켓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 밀려 안팎으로 혹독한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싱가포르 e커머스 회사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chah@ewha.ac.kr

사태가 발생하면 급하게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금지하는 정책 방향은 재고돼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오픈마켓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법·제도의 정비를 고민해야 한다.

생하면서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온 국내 e커머스시장의 만났이 드러났다. 2003년 G마켓을 창업해 국내 오픈마켓 1위에 오른 구영배 대표가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2010년 싱가포르에서 이베이와 공동 벤처 형식으로 세운 회사가 큐텐이다. 큐텐은 2022년 티몬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 인터파크쇼핑,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하고 올해 글로벌 플랫폼 위시와 AK몰을 사들이면서 외형 확장에 집중했다.

이용자 수나 다른 데이터보다 거래액이 가장 중시되는 오픈마켓 특성상 외형 확대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잦은 할인쿠폰 행사를 감행하는 출혈 경쟁은 대규모 적자를 초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판매업체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최장 2개월까지 보유하면서 모기업 큐텐의 사업확장에 유용했다. 결국 모기업인 큐텐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제3의 금융사가 판매대금을 맡았다가 구매 확정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에스크로(escrow)도 지켜지지 않았고, 정산 기일도 다른 플랫폼보다 긴데 이마저 무시됐다.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공급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않고 쌓짓돈처럼 사용하면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도록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이미 시장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화려한 외형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법과 제도의 허점이 악용된 결과라는 점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임무를 소홀히 한 당국도 책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태가 발생하면 급하게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금지하는 정책 방향은 재고돼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오픈마켓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나라경제 | [nara.kdi.re.kr](http://nara.kdi.re.kr)



나라경제 KDI의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잡지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mailto: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www.facebook.com/kdinara1990](https://www.facebook.com/kdinara1990)



## 반려견은 한 철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닙니다.

유행에 따라 쉽게 사고 버려지는 옷처럼 반려견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양 전, 자신의 주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주세요.  
가족이 되기 전, 입양하고자 하는 품종의 성격과 특성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들의 책임감 있는 주인이 되어주세요.

kobaco  
공익광고협의회